

2012년도 업무계획

---

# 2012년 업무계획

-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-

---

2011. 12. 16.

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 
**농림수산식품부**



# ❏ 목 차 ❏

I.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 .....	1
II.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.....	11
III.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.....	17
1. 체질개선·미래준비 .....	19
(1)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 .....	19
(2) R&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 .....	23
(3) 수산업 체질개선 .....	30
(4)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.....	35
2. 활력창출·생활안정 .....	43
(1)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.....	43
(2) 인력 육성·유입·지원 체계화 .....	48
(3)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.....	54
(4) 투자 활성화 .....	60

<b>3. 소득안정·위험관리</b>	<b>63</b>
(1)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	63
(2)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	67
(3) FTA/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	72
<b>4. 안전식품·안정공급</b>	<b>75</b>
(1) 안전 농식품 공급	75
(2)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	82
(3) 안정적인 식량 공급	89
(4) 기후변화 대응	101

---

# **I .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**

---

1. 성 과
2. 반 성
3. 현 좌표 진단



# 1. 성 과

- (농협개혁)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,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'농협법' 개정 완료('11.3)
  -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-2지주회사(경제·금융) 체제로 전환
    -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축산물 판매·유통·가공 등 경제사업 전담
  -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('11.9)
  
- (FTA대책)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(21.1조원 → 221)
  -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(80→85%),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(2.2조원 → 4.0),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재정·세제지원 강화
  
- (농림어업 성장) '04년 이후 40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\*이 '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
  - \* ('00) 37.1조원 → ('07) 41.6 → ('08) 46.0 → ('09) 49.9 → ('10) 50.9
  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등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농수산물 생산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
  
- (식품산업·수출)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·전략 산업화하여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확대 견인
  -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('11.9) 및 김치·전통주·장류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한 수요 창출

\* 막걸리 출고량/시장규모 : ('07) 172천kl/29천억원 → ('08) 176/3.0 → ('09) 261/4.4 → ('10p) 412/7.1

-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, '11년 농식품 수출액은 76억불로 전망 (11.30기준 65.6억불)되며, 최근 4년간 38억불 수준 증가('07 : 38억불)
  - \* '08년 이전에는 농식품 수출 10억불 증가에 20년 소요('88 : 32억불 → '08 : 45)
-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로 인지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
  - \* 뉴욕시민 한식 선호도 증가('09 : 9% → '11 : 31), 미슐랭가이드 인증 스타급 한식당 지정(4곳)
- (미래준비) R&D투자 효율화, 종자·생명산업 등 농식품분야 성장동력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
  - R&D 공동기획단 운영으로 중복투자 사전차단 및 종자·종묘 개발을 위한 'Golden seed project' 추진('12~'21년간 4,911억원 투자)
    - \*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20개 개발 (토마토, 백합, 고추, 넉치 등)
  - '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'(12월) 및 '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'(7월) 수립 등 정책적 대응노력 강화
- (식품안전) 소비자의 알권리,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  -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\* 및 이력제 확대('08 : 국내산 쇠고기 → '10 : 수입산 쇠고기, '14년 돼지고기)
    - \* ('07) 구이용 쇠고기 → ('11) 소·돼지·닭고기·오리고기, 쌀·배추김치, 수산물(6개 품목)
  - 인증제 통폐합 등 인증체계 정비('10 : 18종 → '11 : 11, '13년까지 8)
- (수급안정) 유통구조개선,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 대응 강화
  - 농협 계약재배 및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확대('09 : 52억원 → '11p : 6,000)
  - 쌀 가공산업에 대기업 참여로 가공제품 개발 및 수요 확대
    - \* 가공용 쌀 소비량 : ('07) 183천톤 → ('10) 304 → ('11p) 357



- '국가곡물조달시스템'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곡물회사 설립(4월)
  - \*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해 M&A 대상기업 발굴 및 지분투자 협의 진행 중
- 러시아와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쿼터 확보
  - \* ('07) 20,500톤 → ('09) 39,000 → ('11) 50,001(추가쿼터 10,000톤 포함)
- (농어가 경영안정) 농어업재해보험 확대,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등 농어가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강화
  -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, 양식수산물, 농어업용 시설물까지, 대상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, 화재 등으로 확대
    - \* ('07) 21품목(농작물 10, 가축 11) → ('11) 50(농작물 30, 가축 15, 양식수산물 5)
  -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, 중고 농기계 매입 등으로 농가부채 경감
    - \* 구입비용 절감(누계) : ('07) 338억원 → ('08) 889 → ('09) 1,569 → ('10) 2,429 → ('11p) 3,448
  -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
    - \* 가입자격 : 부부 모두 65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, 소유면적 30,000㎡ 이하 농업인 ('11.11월말 현재 983명 약정체결, 월평균 96만원 지급)
- (농어촌) 정주여건 개선, 의료·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유입 촉진
  - 농어촌 공공서비스기준, 영향평가제도 등 선진제도 도입 및 제1회 '귀농·귀촌 박람회' 개최('11.11)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보제공
    - \* 귀농 가구수 : ('07) 2,384호 → ('08) 2,218 → ('09) 4,080 → ('10) 4,067
  -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'우리 농어촌 운동' 추진중
    - \* 재능기부 신청자('11.11월 현재) 1만명('13년까지 10만명 확보)

## 2. 미흡한 점

- (경쟁력 확보) 한·미, 한·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분야 신규투자 미흡
  - ‘先 대책, 後 비준’ 원칙에 따라 국내보완대책을 마련·시행 중이지만,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
  - 농어업인은 시설현대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 줄 것을 건의(FTA 대책 관련 농어민 간담회, 1~6월)
  
- (유통체계) 협동조합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미흡
  - 수급·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생산자단체의 조직화, 계통 출하, 수급조절 시스템 취약
    -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초기단계로 성과를 가시화하기에는 내·외부 요인(상품특성, 기후 등) 및 판매사업에서 농협의 역할 부족
  - 농산물 수급안정대책(‘11.1) 추진에도 불구하고, 배추·고추 등 일부 품목의 수급불안 반복
    - \* 평균 소매가격 : (‘10.11월) 배추 3,443원/포기, 고추 10,140원/600g → (‘11.11월) 1,523, 17,450
  
- (구제역 대응) 사상 최악의 구제역,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경제적·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
  - 초동대응 및 백신접종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(SOP) 미흡
    - \* 근본적 개선을 위해 ‘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’ 마련·추진중
  - 열악한 축사환경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

□ (농어가 소득·경영) 농어가 소득정체 및 경영비 부담 가중

- 평균 농어가 소득은 3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, 도시근로자 가구의 2/3 수준('07 : 농가 72.9%/어가 69.9% → '10 : 66.8/74.2)에 불과

\* ('07) 농가소득 32.0백만원/어가소득 30.7백만원 → ('10) 32.1/35.7

- 사료, 농약가격 등 농어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반면, 농어가판매지수는 하락하여 농어가 교역조건은 악화

\* 농어가 교역조건 = (농어가판매가격지수/농어가구입가격지수)\*100

\* 농가 교역지수('05 = 100) : ('07) 96.8 → ('08) 86.2 → ('09) 83.9 → ('10) 88.5

□ (식품산업-농어업간 연계 부족) 식품산업의 영세성, 식품산업과 농어업간 연계부족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

- 대부분의 식품제조·외식업체가 영세·자영업자(5인 미만 업체 84.5%) 중심으로 운영

- 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만, 안정적인 원물 공급 체계 미흡, 낮은 가격 경쟁력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

□ (농어촌 생활여건) 농어업인 '삶의 질 개선 대책' 추진으로 복지여건 개선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, 생활여건은 여전히 미흡

- 의료·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에 대한 도시-농어촌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, 농어촌의 활력도 저하

\* 삶의 질 만족도(농업인/도시민) : ('08) 13.1%/19.3% → ('10) 12.6/26.9

-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적 관심과 지원노력 부족

### 3. 현 좌표 진단

□ (농어업 구조) '00~'10년까지 농림어업생산액은 연평균 3.2% 증가했지만, 부가가치는 정체(GDP 대비 비중은 매년 0.2%p 수준 감소)

\* 농림어업 부가가치 : ('00) 24.9조원 → ('07) 25.2 → ('08) 24.7 → ('09) 26.6 → ('10p) 27.0

○ 쌀 등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감소('00 : 18.6조원 → '10 : 17.4)한 반면, 축산업·어업은 크게 증가\*

\* 축산업/어업 부가가치 : ('00) 2.6조원/2.2조원 → ('10) 5.0/2.6

-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로 지속 증가 ('00 : 11.1백만원/인 → '10 : 17.3)

○ 식품제조·외식산업 부가가치\*는 국민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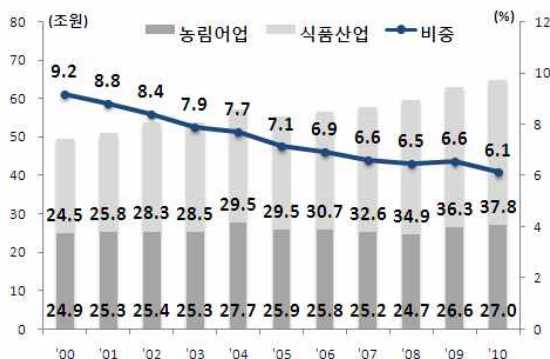
\* ('00) 24.5조원 → ('07) 32.6 → ('08) 34.9 → ('09) 36.3 → ('10p) 37.8

○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('00년 대비 30.2%↓)와 함께, 고령화도 급격히 진전('10년 농림어업취업자 중 65세이상 비중 55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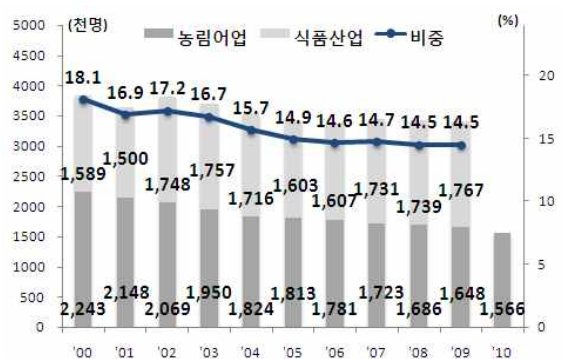
- 농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농·영어 규모의 양극화 진행

\* 영농 규모별 재배농가 비중(1ha 이하/3ha 이상) : ('00) 59.2%/6.1% → ('10) 64.6/8.2

농림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



농림수산식품산업 취업자 변화



□ (농어가 소득) '00~'10년까지 평균 농가소득은 연평균 3.3% (23백만원 → 32), 어가소득은 6.6% 증가(19백만원 → 36)

○ '10년 평균 농가소득은 32백만원, 어가소득은 36백만원이지만 연령대별 소득격차 존재(60세 미만 농가소득 49백만원, 어가소득 45)

- 60세 미만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'00년 86.9%에서 '10년 97.6%로 개선(전체 도·농간 소득격차 : '00년 80.5% → '10년 66.8)

○ '10년 연간 판매금액 1억원 이상 농가는 26천호, 어가는 6천호이며, 전체 농어가 중 비중은 지속 증가('00 : 농가 0.6%/어가 3.2% → '10 : 22/8.4)

○ 시설투자 증가 등으로 '10년 농가부채는 27백만원, 어가부채는 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, 부채상환 능력\*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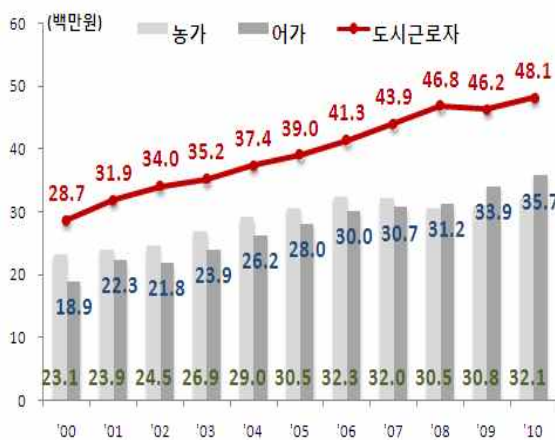
\* 장기부채상환능력(부채/자산) : ('00) 농가 12.6%/어가 11.3% → ('05) 9.1/18.8 → ('10) 7.3/13.8

○ 유류, 농약, 사료 등 농어업 경영비 증가가 농어업 총수입의 증가보다 커 농어업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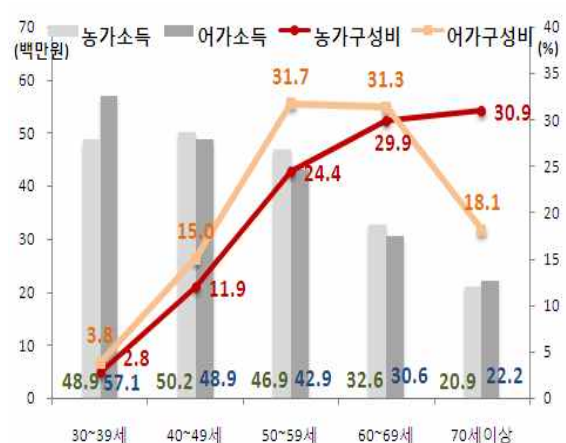
\* 농어업소득률 = 농어업소득(농어업총수입 - 농어업경영비)/농어업총수입

\* 소득률(농업/어업) : ('00) 55.8%/54.5% → ('10) 37.1/44.1

연도별 농어가 소득



연령대별 농어가 소득('10)



□ (농식품 소비패턴) 연간 도시근로자가구당 식료품·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'00년 2,884천원에서 '10년 3,825천원으로 증가

○ 품목별로 국민 1인당 쌀·채소류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,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육류·과실류의 소비량은 증가

\* 1인당 소비량('00 → '09) : 쌀 93.6kg → 74.0, 육류 31.9kg → 36.8, 채소류 165.9kg → 153.6, 과실류 58.4kg → 67.7, 수산물 36.8kg → 49.8

○ 또한, 식료품비 중 외식 지출비중은 증가('00 : 44.4% → '10 : 49.3)

□ (농어촌 생활·복지) '삶의 질 향상 계획(1차 '05~'09, 2차 '10~'14)' 수립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·복지여건 개선 추진

○ 상수도,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

\* '10년 상수도 보급률(면) 66.2%, 의료기관 비율(군) 11.4%, 보육시설 비율(읍·면) 2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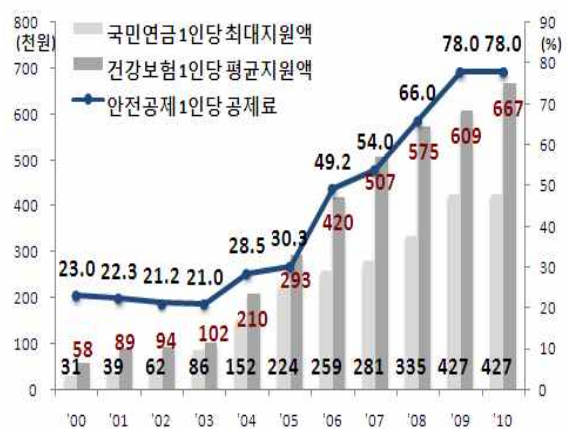
○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(50%)·국민연금보험료(최대 50%)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

\* '11년 건강보험료 436천세대(1,544억원), 연금보험료 219천명(869억원), 양육비 34천명(310억원)

농어촌지역 생활 인프라



농어업인 복지지원



---

## Ⅱ.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

---

1. 정책 추진여건 전망
2.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
3.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





# 1. 정책 추진여건 전망

- 주요국과의 FTA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
  - 미국, 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영향 가시화
    - 호주, 콜롬비아 등 농업 강국과의 FTA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
  - 중국, 일본과도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의 FTA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
  
- 유럽발 금융위기,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안 지속
  - 원유·곡물·사료 등 국제 원자재 가격, 환율·금리 변동 가능성 증대는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 가능
  -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,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과일류 등 일부 기호성 농수산물의 소비에 영향 가능
  
-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
  -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함께, 농경지 침수, 양식품목 폐사, 산사태 등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
  - 탄소상쇄제도 도입 등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(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5.2%)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
  
- 휴양, 일자리 등 농어촌의 유·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
  - 농어촌 경관, 전통·문화유산 관리·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,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
  - 도시민의 귀농·귀촌지원 등을 위한 정보·교육 수요 확대

## 2.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

### 1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(10.11~28)

<도시민·농어업인·전문가 2,296명 대상, 농촌경제연구원 >

#### □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주요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

- 가축질병 대응 강화(55.6%),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(37.9%),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(32.2%)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,
-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(37.5%), 재해 등 위험관리(36.5%),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(23.1%) 분야는 성과가 적다고 인식  
- 아울러, 개방에 대한 정부대책이 적절하지 않다(59.7%)고 평가

#### □ 농업인의 농업·농촌정책 수요에 대한 의식

- 농가 소득안정(54.2%)과 후계농업인 육성(13.4%)이 중요하며, 고령화 및 인력부족(35.3%)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
- 내년도 중점 추진 정책으로 FTA 등 농업개방 대응(27.5%), 농산물 가격안정(27.3%)이 중요하다고 인식

#### □ 도시민의 농업·농촌에 대한 의식

- 가격·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우(63.5%), 쌀(53.3%)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전년\*보다는 낮은 수준

\* 도시민의 품목별 경쟁력 인식('10) : 한우 78.9%, 쌀 75.8

- 아울러,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저하('10 : 51.1% → '11 : 45.1)

## 2

## 농어업·농어촌 정책인식 조사 (11.19~28)

<도시민·농어업인·전문가 1,200명 대상, 농촌정보문화센터 >

### □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

- 식품산업육성(12.9%), 농어촌 복지증진(11.4%), 식량의 안정 공급(11.3%), R&D지원(11.3%)을 높은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
- 농수산물 가격안정(20.5%),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(15.3%), 수출(13.0%), 농협·수협개혁(13.0%)은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
- 아울러,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(31.8%)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

\* 농어가 소득안정장치 강화(21.0%), 직접피해보전 기능 강화(19.2%) 등

### □ 농림수산물식품 주요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

- (쌀) 수급·가격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의 안정적 매입(23.3%), 산업발전 측면에서 가공용 쌀 소비촉진(26.1%)이 중요
- (유통·수출)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사전 생산량 조절(32.8%)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, 수출확대를 위해 판로개척·마케팅(27.8%)이 중요
- (축산)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초기대응(28.0%)이 중요하며, 친환경·동물복지형 축산(26.7%)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
- (수산) 수산자원조성사업(28.8%)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, 양식산업육성을 위해 연안 양식장 오염(28.4%) 해결이 중요
- (농어촌) 종합적인 지역개발(22.0%), 인력육성(20.5%)이 중요

### 3.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

#### 체질개선·미래준비

- ▶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
- ▶ R&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
- ▶ 수산업 체질개선
- ▶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

#### 활력창출·생활안정

- ▶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
- ▶ 인력육성·유입·지원 체계화
- ▶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
- ▶ 투자 활성화

#### 소득안정·위험관리

- ▶ 농어가 소득·경영안정 지원
- ▶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- ▶ FTA/DDA 대응 강화

#### 안전식품·안정공급

- ▶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- ▶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
- ▶ 안정적인 식량공급
- ▶ 기후변화 대응 강화

### Ⅲ.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

1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
2. 활력창출 · 생활안정
3. 소득안정 · 위험관리
4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

# 1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

## 1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

### 가 농어업 시설현대화

◇ 지원방식 변경(보조+융자 → 이차보전)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\* MSY(모든당 연간 출하두수) : ('11) 15두 → ('17) 22(덴마크 25)

- (축산) 축사 신축·개보수, 급이·폐사축 처리시설 등 생산성 향상 및 방역관련 시설 중점 지원
  - '12년도에 양돈 등 약 2천호를 대상으로 시설지원(4,885억원)
  -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,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지정 등 자금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
    - 현행 방식(보조+융자)은 전업농 중심으로 현행 한도(양돈 10억원 등)내에서 지원, 이차보전은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한도 확대(양돈 50억원 등)
    - 과잉사육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·보수만 지원(방역 및 생산성 향상 시설은 제한 없음)
  - 축사시설 보완시 소독조, 휴대용 소독기, 방역울타리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장단위 사전 방역관리 강화
  -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우선 지원 등으로 환경 친화 축산 유도

□ (과수) 사과·배·포도·감귤 등 주요 과실의 품질고급화·비용 절감시설 및 생산기반 정비 중점 지원

○ '12년도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, 관·배수시설, 방풍·방조시설 등 지원('11 : 491억원 → '12 : 627)

\* 과수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('11 : 1,702kg/10a → '17 : 1,950) 및 노동력 절감(157시간/10a → 140) 등 추진

○ 시설포도·시설감귤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다겹보온·지열 난방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전환

\* 시설 재배면적('10) : 6,225ha(포도 2,242, 감귤 3,102, 기타 881)

○ 집단화된 생산단지(30ha이상), 수출 전문단지(52개)를 대상으로 용수개발, 경작로 확·포장 등 지원('11 : 171억원 → '12 : 106)

□ (채소·시설원예)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, 온실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중점 지원

○ '12년도에 고추 주산지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신규 지원(180ha, 180억원)

\*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('11 : 232kg/10a → '17 : 670) 및 병충해 방제회수 감소(11회 이상 → 6~7) 등 추진

○ 시설원예 전문단지의 유리온실·비닐하우스 개보수, 내재해형 시설보급 등 저비용·고품질 시설 지원('11 : 326억원 → '12 : 542)

\* 일반 원예시설 신규지원(500ha, 250억원)



- 다점보온커튼, 지열냉난방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속 보급  
(’11 : 1,422억원 → ’12 : 1,323)
- (수산) ’12년도 노후된 양식장 시설현대화 신규 지원(220개소, 768억원)
  - 10대 전략 양식품목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시설, 자동선별기 등 양식장 기계화·자동화 시설 확충
- (제도개선)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‘농신보’ 제도 개선 방안 마련(1월) 및 규제완화 추진
  -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시설현대화 자금 특례제도 마련
    - 보증한도 : (현행) 농어업인 10억원 / 법인 15억원 →  
(개선) ‘시설현대화사업’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
  - 어장 규모제한 등 진입제한 규정을 신규어장(신규면허 또는 갱신)부터 단계별로 완화
    - \* 어업면허 제한 : ①임대차 불가, ②규모제한(60ha 이하), ③법인 또는 어촌계 소유 면허 매매 불가, ④갱신시 기존 사업자 우선순위 등
    -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도입
      - \*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(6월)
    -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(‘수산업법’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)

## 나 축산업 선진화

### ◇ 축산업 허가제,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

- 축산법 개정과 연계,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도입('12)
  - \* '12년(기업농) → '13년(전업농) → '14년(준전업농) → '15년(소규모 농가)
- 축사 위치·시설·사육두수·교육 기준 충족시 허가
  - '12년부터 허가대상 등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(21천명, 22억원)
  - \* 교육시행을 위한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('12.3월)
- 허가 대상이 아닌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(유예기간 1년)
- 가축 방역의 효율화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'농장단위 돼지이력제' 도입('14년 본사업)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('12~'13년)
  - 농장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또는 도축 금지('12.10월~)
- '낙농산업 선진화 방안'의 차질 없는 추진
  - 원유 200만톤 수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'전국단위 수급 관리체계' 구축, 생산비와 연계한 '원유가격 연동제' 운영 등 시행
- '말산업 육성법'('11)에 따라 말산업을 레저산업, 농외소득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'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' 수립('12년 상반기)
  - 특구지정, 승마시설 확충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
    - \* 특구지정기준 : 사육농가 50가구, 사육규모 500마리, 연간 매출규모 20억원 이상
  -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, 말조련사 등 자격제도 도입 및 '말산업 복합단지' 조성 등 추진

## 2

## R&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

### 가 농림수산식품 R&D 강화

◇ 생산·유통·식품분야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○ 중장기 투자계획 : ('12) 9,089억원 → ('14) 1.3조원 → ('20) 3.9

□ 첨단 생산기술 개발, FTA대응 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 
중점분야의 연구개발 집중 및 투자 확대 추진

○ 첨단 환경제어, 온난화 대응 품종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 
생산성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('13~'20년까지 1조원 투자)

○ 농수산자원에서 고부가가치소재 개발('13~'22년간 5,982억원 투자)

\* 천연 방부제, 항생제 대체제, 바이오 향료 등 10대 소재 개발

□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R&D 지원 체계 선진화

○ 소액·다건 지원에서 대형·프로젝트형 지원체제로 전환

-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 및 관리기관의 연구관리 효율화 유도

○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(12월) 등을 통한 성과관리 전주기화

- 기획·관리·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성과평가 강화

○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강화

\* (현재) 카드사용 파악(17%) → (개선, 12년) 계좌 및 카드사용 파악(95%)

□ 우수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 및 정책자금 지원

- 농림수산물분야 우수 실용기술의 발굴 및 실용화·산업화를 위한 농림수산물 신기술 인증제도 기획(6월)
  -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
-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(1,000억원, 금리 3%) 지원(3월)

□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수준평가 및 중장기 추진상황 검토

- 연구개발 사업별 **Micro road map** 작성(7월) 및 기술수준 분석(11월)을 통해 R&D 사업별 추진전략과 연계성 강화
  - \* '12년 농림수산물분야 최초로 7대 산업별 기술수준을 조사·분석하여, 선진국과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평가

□ 소규모 농가대상 수익창출 R&D 모델 개발

-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·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적 가치가 높은 수익모델로 연계
  - \* (과거) 신제품 개발, 재배, 가공·유통 별도 지원 → (향후) 분야별 통합 지원
- 생산·상품화·마케팅 등 종합기술을 투입, 40개 거점 육성(12월)

□ 농식품분야 현장애로 기술 해결 및 사업화 촉진

- 질병원인 규명, 재해 피해 최소화 등 현장지원팀(30개) 구성
  - \* 농진청(농촌현장지원단), 산림청(임업기술컨설팅), 수과원(수산현장기술지원단)
-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실용화 전담기관 기능 강화
  - 특히 출원·관리 강화 및 수산, 임업 분야 기술이전 지원

## 나 종자산업 육성

◇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 및 민간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

-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R&D 투자 확대
  - 'Golden Seed Project('12~'21년 4,911억원, '12년 25억원)'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센터 구성(3월)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(12월)
    - 20개 전략품목의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(농산 : 벼, 감자, 배추, 무, 토마토 / 축산 : 돼지, 닭 / 수산 : 넙치 등 )
  - 수입종자 대체를 위한 '로열티 대응사업단 운영'('12 : 63억원) 및 해외적응성 시험 확대
    - \* 대상 품목 : 딸기, 국화, 참다래, 버섯, 장미, 난 등 6개 작물
    - \* 국산품종 보급 : ('11) 딸기68%, 국화 20, 참다래 15 → ('12) 70, 23, 20
    - \* 해외적응성 시험 : ('11) 5개국 28개 품종 → ('12) 6개국 30개 품종
- 민간의 육종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및 인력양성 지원
  - '민간육종연구단지(Seed Valley)'를 신품종 육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(29억원)
    - 20개 민간 종자업체 유치, 민간육종의 시너지 효과 도모
    - \* ('11~'15) 270억원 (전북 김제 54ha) / ('12) 설계 및 기반공사
  - 육종세대 단축,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'방사선육종센터' 설립(39억원)
    - \* ('10~'13) 132억원, 전북 정읍(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) / ('12) 시설공사

-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‘채소류육종연구센터’ 사업 추진
  - ('11) 석·박사 등 27명 → ('12) 29명('19까지 270명 양성 목표)
  - \* 10년간('10~'19) 100억원, 서울대 등 5개 대학 및 3개 종자업체 참여

□ 우수 종자 보급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

- 딸기, 화훼, 버섯 등의 우량 종묘 생산기관 지원(7개소, 39억원)
- 벼·보리 등 정부 보급종 검사강화로 고품질 종자 공급('11 : 36톤 → '12 : 37)

□ (축산) 한우 종축 분산 관리 및 우량 유전자원 선발 강화

- 구제역 등 대비, 한우 종축 분산 관리(3개소, 서산·무주·영양)
  - 신규 분산처(경북 영양)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('12~'13년)
- 우량 유전자원 보급을 위한 한우 종축 선발 강화
  - 당대검정두수 확대(500두→600)를 통해 우량종자 선발비율 강화(5%→3.8)

□ (수산) 품종보호제도(UPOV) 시행('12.1월)에 따른 해조류 신품종 관리 기반 조성 및 개발 확대 추진

- 신품종 출원·심사·등록 및 종자 유통관리를 위해 수산식품 품종관리센터 운영('12.3월~, 국립수산과학원)
- 수입대체용 해조류 신품종 개발 확대('11 : 36, 미역3 → '12 : 미역1개 추가)

□ (산림) 우수 산림 종자·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

- 소나무, 잣나무, 낙엽송 등 주요 경제수 종자 45톤, 포플러類를 비롯한 바이오순환림 등 묘목 41백만본(17천ha) 생산·보급
  - \* 편백, 가시, 후박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난대수종 종자와 묘목생산 확대

## 다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

### ◇ 생명자원의 활용도 제고,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

- 생명자원산업화센터 건립('12) : 6개소(곤충 3, 천연색소 2, 양잠 1)

### □ '생명자원통합정보서비스(BRIS)' 구축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(1월~)

- 생명자원의 활용·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전자원정보를 DB화(6만점)하고, 타 부처 정보시스템(수출입신고 등)과 연계 운영

### □ 곤충·동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

- 지역별 곤충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등을 위한 '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' 건립 지원('12~'14, 1개소, 총 50억원)
-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·음료소재 개발 등을 위한 '천연 색소산업화지원센터' 건립 지원('12~'14, 3개소, 총 150억원)

### □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기반조성 추진

-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,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('12년, 8개소), 양잠산물종합단지 시범조성('12년 1개소) 등 산업화기반 구축

\* 누에, 뽕잎, 오디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개발 : ('11년까지) 9종 → ('12) 4

### □ 농림수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R&D 지원 강화

-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성분평가 및 제품개발(523억원)

\* 곤충자원의 약리성 및 독성 평가('12~'14, 12억원), 지역 특화 생명자원 활용 고부가 제품 개발('12~'14, 15억원), 농수축산용 미생물산업화('12~'14, 13억원) 등

## 라 낚시·관상어산업 육성

### ◇ 낚시 및 관상어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어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

#### □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, 낚시문화 선진화 등 낚시산업 육성

##### ○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

- 바다낚시터 허가제 시행 및 수상구조물 인증기준 마련(9월)
- 낚시터 허가기간 연장(5년→10년) 등 내수면 낚시터 규제완화 추진
- 우수 낚시터 등 종합적 낚시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(12월)

##### ○ 낚시 서비스 질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

- 낚시업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(교재개발 : 11월, 시범교육 : 12월)
- 낚시인을 대상으로 낚시터 청소, 낚시제한 어종 등 홍보 확대
- \* 건전한 낚시문화 리플렛 제작·배포, 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 유도 등

##### ○ 종합적인 낚시 산업 육성 대책 마련(2월)

#### □ 관상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

##### ○ 관상어 품종개량, 기능성 용품개발\* 등을 위한 R&D 확대 (560백만원)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(120백만원)

- \* 토속 어종의 관상 가치 개발, 로봇관상어, 이끼 방지 수족관 개발 등

##### ○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법률안 마련(12월)

- \* 육상 해수 관상어 양식, 산업 단지 조성 및 지원, 관상어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및 지원, 수족관 관리자 제도 도입 등 관련 내용 검토



## 마 도시농업 활성화

- ◇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도시농업시민 운동 전개, 박람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
  - 도시텃밭 조성 확대 : ('11) 485ha → ('12) 550

### □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'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1.11.22 제정)'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(5월)
- 지자체별 도시농업 육성 조례 제정을 확대하여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('11 : 21개 지자체 → '12 : 40)

### □ 도시농업 육성 추진체계 마련 및 미래형 기술 개발

- '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' 수립(7월) 및 '도시농업위원회' 구성·운영(6월)을 통해 정부간 협조체제 강화

\* 종합계획(안) : 도시농업 공간 확대, 도시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, 건물 실내·외 녹화기술 등 R&D 전략 마련 등

- 수직빌딩농장 등 미래형 식물생산 산업화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(11월)

\* 고부가가치 작물개발, 환경제어기술 표준화 및 기술 로드맵 작성, 해외실증 연구 등

### □ 공감대 형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, 박람회 개최 등 시민운동 지원

- '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'(6월) 개최로 도시농업 기술·정보 교류 확산

### 3 수산업 체질개선

#### 가 연근해 어업관리 체계화

◇ 체계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전략 마련 및 어선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선진화 도모

#### □ 체계적·종합적 어업구조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 확충

-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허가 유지를 위해 허가정수 재조정(6월)
  -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(2월)를 거쳐 관계법령(수산업법 시행령 등) 개정
- 구조조정 방식을 어업인 희망 감척에서 자원남획용 어업 중심의 자원관리형 감척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절차 확립
  - 감척 대상 업종 선정, 감척절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상연습 실시
  - \* '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정('12.7월 시행)으로 어업인 희망 또는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사업 근거 마련

#### □ 어업 효율성 제고,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설개선

-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선구조 개선을 위한 어선톤수 조정(10월)
  - 어획강도를 높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업종별 어선톤수 제한을 완화
  - \* 현행 어선톤수 제한 규정 : 연안 10톤 미만, 근해 140톤 미만
-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로 조난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
  - '12년 5톤 이상 어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('15년 도입 완료)
- 사고예방을 위한 '(가칭)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정부안 마련(12월)
  - 시범 실시중인 구명조끼 보급('11 : 2,200개)을 '13년부터는 본격 확대

## 나 수산자원 조성·관리 강화

◇ 수산자원 조성·관리의 내실화 및 생태환경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

### □ 총허용어획량(TAC)의 설정 및 관리 내실화

- 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를 통해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체계 마련(12월)
- 양도성개별할당제(ITQ,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) 도입 검토  
- 어업자별 할당 방법, 할당된 배분량의 매매 또는 임대 방법 등

### □ 연안 및 내수면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

- 연안 바다목장 5개소(웅진, 양양, 포항, 통영, 부안) 추가 조성  
\* 바다목장조성(누계) : ('10년까지) 22개소 → ('11) 26 → ('12) 31(신규 5)
- 바다숲 조성('11 : 705ha → '12 : 840)으로 산란·서식장 복원
- 하천·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도모델 개발 및 인공산란장 설치(4개소)

### □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조사 강화 등 어장관리 제도 정비 (어장관리법 개정, 8월 국회 제출)

- 어장환경 조사시기(5년 주기→수시), 범위(어장관리해역→전어장) 확대 등

### □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·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 시스템 구축

-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전담선(1,250톤급) 배치 및  
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

## 다 10대 전략품목 및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

- ◇ 전략품목 종묘생산기술 확보 및 신개념 양식기술 개발
- ◇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### [10대 양식전략품목 육성]

- 종묘생산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·관 공동 기술 개발
  - 참다랑어, 해삼 완전양식을 위한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
    - 참다랑어 어미를 확보하여 수정란 채집 및 부화시험 실시
      - \* '11년 몰타에서 참다랑어 수정란 이식, 세계 4번째로 인공부화(45마리)에 성공
    - 한·중 기술협력을 통해 해삼 우량종묘(5g 내외) 생산기술 확보
  - 10대 전략품목별 민·관·학·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, 맞춤형 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지원
- 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 및 양식어장 확대
  - 소비지 인근 빌딩형 양식 등 관광·소비기능을 겸한 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(5월)
    - \* 빌딩양식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('11.1~12월)
  -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외해, 갯벌 등 신규어장 개발(4천ha)
    - \* 전복 2,000ha, 김·미역 1,762, 굴 140, 기타 45
- 양식용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
  - 주산지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(제주, 1개소)

## [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]

- 서·남해안 갯벌을 활용하여 무급이·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  - 갯벌참굴, 해삼 등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인공종묘생산, 양성 및 가공기술 집중 개발
  - ‘(가칭)갯벌양식어업육성법’ 제정으로 유희,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·체계적 이용·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

### <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 주요내용>

- ▶ 갯벌실태조사,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
- ▶ 갯벌어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갯벌어업육성지구(생산, 종묘육성) 지정·운영
- ▶ 갯벌어업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- ▶ 마을어업에 양식업을 허용하고, 신규인력 및 대규모 자본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권 임대차 허용 및 위탁관리제 도입

- 갯벌양식어업에 대한 임대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(‘수산업법’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)

## □ 수출용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- 갯벌참굴 양식적지 조사(’12 : 1천ha → ’15 : 4) 및 종패생산 기술 민간이전(수산과학원 → 어촌계)
-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수평망식 양식어장 시범단지(30ha) 조성
  - 종묘생산+양식+가공+유통(수출)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모델 구축
- \* ’11.12월 갯벌참굴 시범사업(’12 : 40억원) 출범(태안)

## 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

◇ 원양어선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 저변 확대

-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(建造)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
  - 고수익성 참치잡이 어선은 대체건조(4척, 154억원),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징어·꽁치잡이 어선 등은 시설 개선(1척, 10억원) 추진
- 해외진출을 통한 원양산업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
  - 양식시설·가공공장 등 해외 수산시설 인수·설립 지원(12억원) 및 투자정보·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계획 수립(4월)
    -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산업의 해외 성공 사업모델의 확립·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('13년 이후) 방안 연구
    - 투자기업 현지 지원을 위한 해외 개발거점 설립(3개소) 검토 등
  - 상업 조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외 신어장 조사(2개소, 17억원)
  - 수산자원 개발 및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해외양식 진출
    - 권역(국가)별 투자환경, 유망 품목·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투자정보 공유를 위한 민·관·연 협의체 운영
- 국제 자원관리 규제를 반영한 원양산업 정책 및 제도 정비
  - 허가제도 개편 등 '원양산업발전법' 개정(6월 국회제출 예정)

## 4

#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

## 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

◇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 확충

### 【 글로벌 역량강화 】

□ 핵심 식품기술 R&D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

○ 18개\* 핵심 식품기술 중심으로 R&D 지원 확대('11 : 248억원 → '12 : 290)

\* 기능성 증진, 신소재 개발, 발효핵심 기술, 저탄소·융복합 가공, 식품유통기술 등

- 식품기술 연구기관간 중점연구 분야 분담을 통한 R&D 효율성 및 산업화 제고(식품 R&D 중장기 계획 보완, 9월)

\* 역할(안) : 농식품부(상품화, 290억원), 농진청(원천기술, 59), 한식연(기업협업 171)

○ 식품시장 특성·수요 등을 감안한 식품인력 양성 종합계획 마련(9월)

- 성장단계(진입·선도·성숙), 인재군(고급인력, 현장인력 등)별 맞춤형 교육

- 교육기관별 연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

\* '17년까지 10만명(누계) 교육을 목표로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등 기관별 연간 교육 목표 설정

-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·운영(aT 농식품유통교육원)하고,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 교육 확대(신규, '11 : 4개 대학 → '12: 5개)

□ 식품분야 대기업-중소기업간 동반 상생을 위한 공조노력 강화

○ 동반성장 가능품목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사업 지원

\* 대기업은 중소기업 협력사에 원가혁신, 품질고급화 기술 전수 등으로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, 자체 유통망을 통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전국 판매

○ 식품제조업체-대형 유통업체간 '상생발전 협의회'를 설치(9월) 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

□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식품기업 One-stop 서비스 제공

○ 식품기업의 애로접수·상담, 기업진단·컨설팅, 자금·R&D 등 종합지원

\*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기업 : ('10) 946개소 → ('12p) 1,100 → ('17) 2,000

○ 해외 식품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대상국 시장현황·전망, 검역, 현지업체 현황 등 정보 수집·전파

○ 식품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안내서 발간(3월)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(전북 익산) 단지지정, 기업유치 활동 본격 전개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·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('12년 상반기)

- 글로벌 수준의 기능성평가센터 등 6개\* 핵심 지원시설 기본 설계 마무리

\* 기능성평가센터, 품질안전센터, 패키징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지원센터

-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기업 역량강화

\* 덴마크·스웨덴 '외레순'의 푸드네트워크 사례 : 입주기업·기관간 협의회 구성·운영, 국내외 기업·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구성 등

○ 글로벌 선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(연중)



## 【 식품산업 부가가치 제고 】

### □ 설탕·제분·첨가물 등 ‘식품소재 산업 활성화방안’ 마련(8월)

- 소재별 국내외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, 해외진출 확대 전략 수립

### □ 전통·발효식품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

- ‘김치산업 종합계획’ 수립(7월), 김치 품평회(11월) 등 추진

\* 김치산업진흥법('12.1.23) 시행에 맞추어 자조금 조성 및 김치문화 확산방안 등 마련

- 장류·소스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수출용 상품개발 및 해외 판촉 지원 강화

- 천일염 품질인증제(제품·생산방식 인증) 시범사업 추진(6월), 염전 주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 마련(9월)

- 소금산업진흥법('12.11.22) 시행에 따른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(12월)

- 술 품질인증제 확대\* 및 숙성명주 프로젝트 추진(과실주·증류주, 5월)

\* ('11) 막걸리, 약주, 청주, 과실주 → ('12)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 추가

### □ 기능성 식품 및 식품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저변확대

- 기능성 소재 DB를 기존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식품까지 확대하고, 연구자 및 식품기업에게 정보 제공

- 업체의 기능성 식품 개별인정을 위한 동물·독성시험단계 평가지원(21억원)

- 국내 최초 포장기술 전문연구기관인 ‘패키징센터’ 기본 설계(6월) 및 식품 기자재 R&D 지원 확대('11 : 14억원 → '12 : 20)

\* (식품기계) 살균·제어기술, 한식 조리장비 표준화, (식품포장) 기능성·친환경 포장 등

## 나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

◇ 식품산업이 국내 농수산물의 핵심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과의 연결고리 강화

### □ 국내산 원료 조달 확대 및 식품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

- 식품기업이 사용하는 국산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(9월)
  - 식품기업 생산자간 원료공급 규모화 및 계약이행 안정화(농협역할 강화) 유도
    - \* ‘식품기업(수요자)-농협중앙회(사업관리)-단위농협(공급자)’ 공급망 확충
- 농어업인의 시제품 생산,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플랜트 확충(시군농업기술센터, 누계, '11 : 8개소 → '12 : 12)

### □ 지역전략식품사업 및 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

-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성과평가(3월) 및 '13년 사업단 신규 선정(10개소, '12년 하반기)
  - 67개 사업단 대상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(50억원)
    - \*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식품을 등록·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와 연계강화
-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발굴·육성('12년 200개, 누계 300)
  - 농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및 R&D·컨설팅 등 지원
    - \* 농공상 융합기업 자금(172억원, 융자 3~4%), 컨설팅 지원(5억원) 및 R&D지원(20억원)
    - \* '11년 선정사례 : 농업법인(주)장수채가 여주땅콩작목반과 장수채 판매(주)와 협력하여 땅콩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를 일괄 추진('10 : 매출 7억원 → '12목표 : 173)

## 다 농식품 수출확대

### ◇ 수출기반 확충 및 공세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'수출농어업' 견인

- 농식품 수출 : ('10) 58.8억불 → ('11) 76.9 → ('12년 목표) 100

### □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\* 중점 지원

- \* 신선 : 인삼, 김치, 파프리카, 배, 버섯, 장미, 딸기, 사과, 토마토, 단감 / 가공 : 소스류, 면류, 유자차, 조제분유, 막걸리 / 수산 : 김, 넙치, 굴, 전복, 해삼 등

- 품목별 해외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, 연차별 수출지원 로드맵을 마련(상반기)하여 스타 품목으로 육성

- 전략 품목별 '수출촉진단' 운영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

- 검역장벽 해소, R&D, 해외마케팅 등 우선 해결과제 발굴·지원

- \* 수출촉진단 : 농식품부, 농진청, 지자체, 유통공사, 품목별 협회·단체 참여

### □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

-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계열화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('11 : 18개)을 수출 공동브랜드 '휘모리'와 통합(3월)하여 집중 육성

- \* (사례) 팡이버섯 수출의 84%를 점유하고 있는 9개 업체가 설립한 선도조직이 품질 균일화 및 안정적 물량 공급을 통해 일본 최대 유통그룹 '이온' 진출

-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강화

- 수출 농산물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'12년 상반기)

- 수출용 패류 해역(7개) 확대 및 수출 양식장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실시

### □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체크 프라이스 등 자율규제 추진

- 저가 수출 등 수출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정착

- \* '11.11월 현재 사과, 배 등 주요 품목(12개)에 대한 가이드라인(가격, 품위) 운영 중

□ 개별업체 직접 지원에서 물류 경쟁력 중심의 간접지원으로 전환

○ 전문물류업체를 선정(상반기)하여 수출업체의 공동 이용 지원

\* 다품목 포괄 운송이 가능한 가공식품에서 시작하여 농산물로 공동물류 확산

○ 해외전진기지(중국 청도, '12년 말 운영업체 선정) 구축 및 해외공동 물류센터 확대('11 : 5개국/9개소 → '12 : 6/11)로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

○ 저장 유통기술 활용 및 물류 최적화에 필요한 시험 운송 지원

\* 예시 : 항공으로 동남아에 수출되던 쌀의 경우, 최근 살균·훈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 제고

□ 주요 시장별 현지화 노력을 통해 전략적인 해외시장개척 추진

○ FTA 체결 국가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 확대

- (중국) 동부 연안에서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시장 확대

- (아세안) 국가별 선호 품목\*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·판촉

\* 예시 : 베트남(인삼), 말레이시아(단감·딸기), 필리핀(조제분유) 등

- (미국) 교포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인 마켓으로의 진입 확대

○ 수출업체지원정보시스템\*을 통해 업체별 맞춤형 지원 추진

\* 업체별 수요 조사, 지원 대상 선정 등을 관리하고, 수출지원기관(aT)과 업체 간 쌍방향 소통의 매개가 되는 정보시스템('11.10월 구축)

- 시장개척·바이어 발굴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

\* 북미·유럽·중화권 등 권역별 대표박람회에 한국관 구성·운영('12년 총 38회)

- 해외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 지원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

## 라 외식산업 진흥 및 한식세계화

- ◇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
- ◇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

### □ 외식산업 경영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

- 외식업체 시설·경영 표준화 모델개발 및 컨설팅·마케팅 등 지원
  - 지역별로 대학·연구소 등을 외식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
- 외식프랜차이즈 평가(10월)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외식업체 육성
- 현지 정보제공, 바이어소개, 법률상담, 해외박람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우수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

\* 해외진출 계획: ('11) 65개업체/1,322개 점포 → ('17 목표) 100/5,000

### □ 외식업체와 산지간 연계 강화로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

-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(4월)
  - 식품안전·위생 시설 인프라가 구비된 유망 외식업 지구에 경영 개선, 조리 교육, 홍보사업 등을 중점 지원

\*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30% 이상, ('12) 최대 10개소 → ('17) 60(연간 10개소)

- 국내산 식재료 사용 유도 및 식재료 규격 표준화로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 구매 활성화

### □ 외식산업 현황을 제공하는 '한국외식 경기지수' 조사·발표(분기별)

- 외식업체의 연매출, 종업원 수, 국내산 식재료 비중 정보를 조사하고, 3개월 후의 외식경기 예측 등 정보제공

□ **한식세계화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과 선택·집중 전략으로 내실화**

○ **시장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단계별로 확대**

- 지역별 정보·전략조사 및 상표권위생·통관 등의 가이드북 제공

\* 진출지역 : ('10) 북미, 아시아 → ('12) 유럽, 호주 → ('14) 중동, 러시아

○ **해외 인지도가 높은 단품 위주의 상품개발 등 지원 강화**

\* 5대 전략메뉴 : 비빔밥, 불고기, 갈비, 잡채, 전

○ **한식과 식문화에 대한 R&D 지원 및 국제문화유산 등재 참여**

- 고 조리서, 북한전통음식, 식생활 풍속서 등 약 900권 DB화

- 한식의 현지 적응성 제고를 위한 메뉴 개발 및 기능성 연구 확대

- 비빔밥 등 한식과 식문화의 국제문화유산 등재 (문화재청 협조)

○ **해외한식당협의체를 확대('11 : 9개소 → '17 : 20), 해외 거점으로 활용**

- 국내업체와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 및 식재료 직거래 참여

- 한식메뉴·서비스 등 경영 컨설팅과 조리교육, 표준 메뉴판 제공 등 지원

□ **국내외 한식 홍보강화 및 한식 세계화 사업성과 지수개발**

○ **마드리드퓨전 주빈국 참가(1월)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, 한류(K-pop 등)를 활용한 음식·문화 동반 진출**

\* 마드리드 퓨전('12.1.24~26) : '02년 호세 카를로스 카펠(스페인)이 창립한 전세계 요리사들의 행사로 밀라노, 뉴욕 등 요리 트렌드를 리드

○ **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(3월)로 성과평가 및 사업개선 추진**

- 국내외·국가간 한식인지도 비교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점검

## 2. 활력창출 · 생활안정

### 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

#### 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

◇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으로 농산업의 부가가치 확대

□ 지역의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,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
○ 특화작목 재배·가공, 마케팅,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 지원

\* 충북 보은(향토대추 명품화) : R&D지원, 가공제품업체 집적(제약·차·기능성식품·생활용품 등)으로 제품개발 활성화 및 수출 확대('09 : 1,428백만원 → '10 : 2,554)

○ 포괄보조사업 지원체계('10년 도입)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'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모델' 개발·보급(11월)

-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

○ '농어촌 산업박람회' 개최(6월)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

\* 박람회 전 지자체별 유통품평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 기호에 맞는 스타상품 발굴, 농어촌기업과 유통업체간 계약체결 유도

□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(12월)

○ 향토산업 육성사업(완료75, 진행58)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

\* 향토산업 육성 추진성과('07~'11년)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2~10월)

○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방안 마련

\* 기존 농공단지 가동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개·보수는 지속 지원

## 나 마을단위 공동 경영체 육성

### ◇ 마을단위 공동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일자리·소득창출

○ 마을단위 경영체 : ('11) 1,400개 → ('13) 3,000 → ('15) 5,000

-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체(54개소) 선정, 제품·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등 활동비 지원(개소당 25백만원)
- 역량강화 교육·워크숍·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례집 제작·배포
-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'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' 도입(6월)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
-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조직, 인재육성 등 '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종합계획' 수립(10월)
  
-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실화 및 성공사례 확산
- 공동체 유형별(자원관리·질서유지·경영개선) 구분관리 및 활동 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급(등급별 50~300백만원)
  - \* 참여 공동체 총조사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연구(2~10월)
- 가공·유통·관광 등 공동체 사업 다각화로 어촌소득 증대
  - \*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5개 분야(수산물가공·어촌관광·경영·유통·내수면) 컨설팅 지원(50개소) 및 우수-신규 공동체간 멘토링 지원
-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홍보 동영상 제작·배포(10월)
  
-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 이용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
- 농기계 공동이용 및 공동농작업(농지 단지화, 공동방제, 품종·재배 방법 통일 등)을 통해 생산비 절감, 고소득 작목 재배 등 경쟁력제고 도모
  - \* 공동방제를 통해 10a당 쌀 생산비(농약비·유류비) 4,605원(10.4%) 절감
  - \* '15년까지 500개의 들녘별경영체를 육성 추진('09~'11년까지 113개소 육성)



## 다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

◇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편리·위생·안전성 등 농어촌 관광의 서비스 질 제고

- 다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거점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마을단위 관광 인프라의 한계 극복
  -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지역에 특산물, 향토음식, 전통문화, 자연·생태자원, 경관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
    - \* 한방약초공원(산청군), 과일 테마공원(영동군) 등 12개 지구 신규 조성
  - 방앗간, 마을서원, 폐교 등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'농어촌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' 마련(9월)
    - 시범사업 지구(6개소)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(4월)
-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어촌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강화
  -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(10월)
    - \* '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' 시행규칙 개정 예정(7월)
    - 등급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, 농어촌 관광사업자의 자체적인 수준 향상 노력 유도
  -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주민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교육·컨설팅 지원(48개소, 1억원)

□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및 내·외국인 대상 적극적 마케팅 추진

- 매년 20개소(Rural-20)씩 '14년까지 대표명소 100개소 발굴
  - 관광자원의 의미·역사·가치 등 스토리가 있는 홍보·마케팅 추진
-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(10월)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, 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 활성화
  - \* 기획,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지원(10억원, 축제당 20~60백만원)
- 테마별\*로 '가고 싶은 농어촌 마을' 100선 제작·배포(6월)
  - \* 농어촌 체험 마을, 워크숍·MT하기 좋은 마을, 외국인도 가보고 싶은 마을
- 스마트폰용 웰촌사이트(welchon.com) 애플리케이션 개발(10월)로 농어촌 관광 관련 실시간 정보 및 컨텐츠 제공

□ 농어업·농어촌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농어촌 체험기회 확대

-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(3월)
  - 1사1촌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·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
-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대응, 초·중등 학생의 농어촌의 가치 습득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한 팜스쿨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
  - \* 팜스쿨 확대 : ('11) 20개교 → ('12) 30(개소당 10백만원 지원)
  -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초·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·보급(9월)
  - 농어촌 유학센터에 교육자재 구입,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지원(2억원)하고, 사전 체험을 위한 예비 유학과정 신규 도입

## 라 우리 농어촌 운동

- ◇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('13년 색깔 있는 마을 3천개 육성, 농어촌 리더 10만 육성, 2만 도·농연대 구성)
  - 추진기구 구성, 재능기부자 확보 등 본격적인 운동 추진

- '우리 농어촌 운동' 추진을 위한 중앙·지역단위 협의체 구성·운영
  - (중앙) '국민 운동 추진위원회' 구성·운영(7월)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
    -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'삶의질향상특별법' 개정(12월)
  - (지역) 농어촌 현장포럼('11.11월 현재, 11개 구성)을 통해 마을별 발전과제 발굴, 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등의 기능 수행
    - 농어촌 마을의 유·무형 자원과 역량을 분석·진단하고 농어촌 현장포럼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 육성
      - \* 시·군 당 3인 이상의 현장 활동가(420명 수준)를 선정하여 교육 등 추진
- '12년에는 재능기부자 3만명을 확보('11.11월 현재 1만명)하여 농어촌에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발전 및 활력창출 지원
- 유관기관·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국민 참여운동\* 및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'우리 농어촌 운동'의 시너지 효과 제고
  - \* 농촌사랑범국민운동·농촌희망가꾸기운동(농협), 어촌사랑운동(수협) 등
- '색깔 있는 마을' 육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지원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(3월)

## 2

## 인력 육성·유입·지원 체계화

### 가 정예인력 육성

#### ◇ 농어업·농어촌을 이끌어 갈 신규인력 확보, 전문인력 양성

#### □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편

##### ○ 농식품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(12월)

\* 농어업법인, 농기계·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(6월)

- 농수산고 창업·취업 비중 확대를 위해 첨단 실습장·장비 지원

\* 학교와 연계한 현장실습장 확대(64개소 → 75)

- 선도경영체의 멘토링 지원 대상 확대 : ('11) 10개교 → ('12) 16

- 농수산고 전문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 연수 실시

##### ○ 농어업분야 취업·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·영어 정착과정 운영(11개교)

##### ○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한국농수산대 신규학과\* 신설 추진

\* 신규학과 예시 : 말산업, 어업학과, 임업학과, 농어촌 관광학과 등

#### □ 농어업계 학생,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

##### ○ 농고·농대 창업상담사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,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신설 등 창업지원 기능 강화

○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영 위주에서 현장 실습중심으로 개편(10월~)

-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
○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·한도 확대(기재부 협의)

- 농산지, 어선 / 2억원 → 농어업시설 포함 / 5억원

○ 창업농 등 젊은 인력에 시설·수출 자금 및 농지매입·임대 집중 지원

\* 30대 이하 농업인 농지 지원면적 비율 : ('10) 9% → ('12) 16%(2,500ha)

#### □ 농어촌 지역개발·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 양성

○ 도농교류·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마을리더 및 주민, 마을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교육 실시

\* 교육과정(예) : 마을공동체 운영, 마을발전계획 수립, 갈등관리, 리더십 등

○ 농어촌 지역개발 및 마을사업 관련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·운영(6월)

#### □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농식품 교육체계 개편

○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

\*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심의·조정하는 농어촌교육심의회(위원장:장관) 설치

○ 교육기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모니터링·컨설팅,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(4월), 우수교육 기관 인증(12월) 추진

○ 농어업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농어업인 교육이력 종합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력포털 구축(10월)

\* 기존 농업교육포털(AgriEDU.net)을 확대 개편

## 나 고소득 농어업 경영체 육성

◇ 새로운 시장 창출, 경영능력 제고,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경영체 10만 육성

○ 매출액 1억원 이상 경영체 : ('10) 3만명 → ('13) 6 → ('15) 10

□ 해외 조사, 국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신규품목 발굴·육성

○ 망고, 아보카도 등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新소득 작물 도입

\* 아보카도, 용과, 석류, 올리브 등 아열대성 작목 선발(누계) : ('12) 18 → ('20) 25

\* 고온 적응성 넙치·전복·미역 등 신품종 개발(누계) : ('12) 2 → ('20) 9

○ 품목별 재배방법·재배조건 등에 관한 지침서 작성·보급

\* 사례) 새싹채소, 쌈배추, 블루베리, 콜라비, 미니 맛사지 오이

○ 첨단 종묘 배양장 설치, 양식장 적지 조사 등 신규 품목에 대한 사업화 모델 개발·보급

\* 서해 5도 해삼삼 특화단지 사업 모델 개발(10월)

□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소득 증대 기여

○ 농림수산자원에서 기능성 신물질 및 의약소재 개발

\* 혈압조절(홍국쌀), 뇌경막·치주막 (누에실크), 여드름 치료(봉독)

○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및 산업화 소재 상품화

\* 화석연료 대체 연료(해조류, 포플러), 화장품(쌀 전분), 생분해성 봉투(왕겨)

○ 고부가가치 10대 바이오 소재 프로젝트 추진 (예비타당성 조사중)

\* 동·식물 미생물 활용, 천연 방부제·항생제 대체재, 바이오 향료 등 개발

□ 수출 확대 및 고소득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

○ '14년까지 20대 전략품목의 수출유도와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

- 현장실습교육장과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연계하여 수출 전략 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과정 운영

○ 시설현대화단지, 브랜드경영체 등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자생적 학습조직 100개소 육성

□ 농어업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○ 창업·전업·시설현대화 농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핵심 경영체(강소농) 선발·육성(매년 20천호)

- 경영체 경영진단(1~3월) 결과에 따라 영농기술·가공·마케팅 등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

\* 정부 컨설팅지원단 지역담당관(167명)

\* 품목별 매뉴얼(80품목) 및 농업경영교재(10종) 발간 및 보급

○ 경영체 자산 및 위험관리를 위한 1:1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

- 농협의 농업금융컨설팅과 연계하여 농장경영진단, 경영계획 수립, 투자계획의 경제성 분석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

- 농어업 경영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신보 고액 보증심사시스템 개발(7월)

○ 경영혁신, 판매, 해외시장 개척, 농지거래, 시설현대화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전담자 지정·운영

## 다 귀농·귀촌 활성화

- ◇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  - 귀농·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'귀농·귀촌 종합센터' 확대·재편 운영

### □ 도시민 유치·교육·자금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

-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'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' 지원 확대
  - 도시민 농어촌체험 사업, 빈집 임대사업, 융자금 알선, 멘토링 상담, 귀농·귀촌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등

\* 지원대상 시군 : ('11) 25개 시군 → ('12p) 27

- 권역별(수도권, 광역시, 중소도시 등)·직업별(제대 군인 등)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
\* 교육과정 : ('11) 16개 기관 / 18개 과정 → ('12) 20 / 25

- 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·영어자금 지원

- 농지구입, 시설건립, 양식장구입, 어선구입,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·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(융자규모 600억원)

\* 선도농업인 실습장에서 영농 실습비(840백만원) 신규 지원

### □ 귀농·귀촌 관련 정보·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

- 도시민에 귀농·귀촌 관련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'귀농·귀촌 종합센터' 확대·재편(9월)



-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·귀촌 관련 정보(지원 정책, 부동산 정보 등)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
  - \* 귀농·귀촌 관련 농식품부, 지자체, 유관기관 사이트 통합·관리
  - \* '11년에 구축한 '농어촌 빈집 정보 시스템'과 연계하여 대지·농지·교육, 자금 등 도시민 주요 관심정보 추가 제공

-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관심단계에서 정착까지 단계별·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

○ 시·군 추천을 받아 성공한 귀농·귀촌인을 현장 멘토로 활용하는 '귀농·귀촌 코디네이터' 교육과정 본격 운영

- \* 교육과정 : ('11) 1개 과정, 30명(시범사업) → ('12) 2개 과정(120명 내외)

○ 종합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

-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귀농·귀촌 프로그램 제작·방송(1~3월)
- 귀농·귀촌 박람회 개최(6월),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(12월)

□ 귀농·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농어촌 주택 공급

○ 도시의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'농어촌 뉴타운' 입주 착수

- \* 5지구 700세대 : 단양 100세대, 고창 100, 장수 100, 장성 200, 화순 200

- 시범사업('09~'12)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여부 검토

○ 소규모 마을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제도개선 추진(현행 : 20세대 이상 → 개선 : 10세대 이상)

- '12년에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 15개 지구 신규 조성 추진

- \* '04~'11년간 126지구 추진(완료 5, 건축중 42, 기반정비 34, 준비 45)

## 가 농어촌 삶의 질 개선

◇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·교통 등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

- 노후·불량주택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

□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위해 '삶의 질 계획' 내실화 추진

○ 농어촌 공공서비스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 수정·보완(10월)

- 농어촌 현실 및 관련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서비스기준 달성도 제고 방안 마련

○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'11년도 개선 대상과제 부처·지자체별 추진현황 점검(4~10월) 및 개선과제 발굴(11월)

- 농어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를 위한 농어촌영향평가 매뉴얼 보완(6월)

○ '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'10~'14)'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원기관 지정·운영 등 사무국 기능 강화

- 전문지원기관에서 삶의 질 계획 주요 정책과제의 심층평가,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분석, 농어촌영향평가 등 실시

-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 
'삶의 질 향상 계획 지원체계 개선방안' 마련(10월)

○ 농어촌 복지·교육·의료·도로·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  
개선을 위한 정책공모제 및 분야별 토론회 개최(7월)

- 지역주민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

## □ 농어촌 생활편의 증진 및 친환경 주거여건 조성

○ 노후·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도개선

- 재원 조성 방법 : 국비(80%) + 지방비(20%) → 국비 (100%)

- 지원 대상 주택규모 확대 : 100m<sup>2</sup> → 150

○ 농어촌의 특성,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·에너지 절감형  
주택 표준모델 개발·보급(4~11월)

\* 농어촌 주택과 건축양식 발굴을 위한 '한국 농어촌 건축 대전' 개최(10월)

○ 농어촌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빈집 6.5천동(100억원) 정비

○ 환경부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

\* 농어촌 주택(2천동), 염전 소금창고(3천개소), 정부양곡 보관창고(20개소)

○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'농어촌집고쳐주기사업' 확대

\* 추진 계획 : ('11) 301가구 → ('12p) 375

○ 체계적인 어촌 개발을 위한 권역별 어촌종합개발 추진

\* '94~'11년까지 180개 개발 완료, '12년 25개(신규 2, 계속 23) 사업 추진

## 나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

◇ 고령농어업인,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강화

□ 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

○ 농지연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

- 농지연금제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해 ‘찾아가는 고객센터’ 운영 등 맞춤형 홍보 강화

\* 지원규모 : ('11) 농지연금 72억원, 경영이양직불 623억원 → ('12) 190, 659

○ 고령농어업인,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('11 : 480개소 → '12 : 930)

○ 질병·사고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(10일), 고령·장애·기초생활수급·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(12일) 지속

□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및 의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사회보험지원 강화

○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미가입자 발굴 및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강화

\*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: ('11) 870억원(219천명) → ('12) 924(230천명)

○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·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

\*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: ('11) 1,544억원 → ('12) 1,626

□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

- 보육시설이 없는 읍·면에 연차별로 소규모 국·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

\* 보육시설 확충(10개소, 9억원), 보육교사 특별수당(42천명, 266억원)

-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(무이자 용자) 지원 확대

\* 장학금 지원액(인원) : ('11) 92억원 (3,984명) → ('12) 177 (13,870)

- 방송대, 사이버대 진학생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원격대학까지 확대

□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

- 지역농협을 활용, 정착초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,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'다문화여성대학' 운영(500명)

-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'사회통합 프로그램' 운영(500명)

\* 교육 수료시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, 면접시험 등 면제 혜택

- 결혼이민여성을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 영농교육(500명), 멘토와 연계한 1:1 맞춤형 영농교육(600명) 등으로 구분 실시

-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수료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'모국방문' 지원(200호)

-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'농어촌정착지원과정' 운영(1,200명)

## 다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개발

◇ ‘先 계획·後 개발’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### □ 농어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

○ 농어촌 개발 관련 시·군 단위 의무계획\*을 ‘(가칭)농어촌 발전 기본계획’으로 통합(‘농어촌정비법’ 개정, 12월)

\* 농어촌정비 종합계획, 농산어촌 종합개발계획, 생활환경정비계획, 농어촌 경관관리 계획, 농어촌산업 육성 계획, 정주권개발 계획 등

- 농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모델을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시·군과 공동연구 추진(2~12월)

○ 마을·권역 단위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농어촌 정비계획제도\* 도입방안 마련(10월)

\* 신규개발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제도(국토계획법)를 보완하여 농어촌 지역 개발에 적합한 정비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제도

- 마을 정비구역을 농어촌 정비구역으로 확대·개편하고, 유형별 농어촌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(10월)

- 농어촌정비계획은 지역개발·산업화 등을 포괄하여 수립하고, 해당 구역에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(10월)

○ 지역주민 간 협약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농어촌 지역의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 마련(12월)

- 농어촌 경관 개선·보전을 위해 **경관계획 수립 의무화** 등 추진
  - '12년 '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'을 착수하는 일부 시·군 대상으로 **경관계획 수립 시범사업** 도입
    -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세부지침 마련·시달(5월)
      - \*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의욕 제고를 위해 우수 마을 선발·홍보 및 '농어촌 경관 사진전' 개최(5~10월)
  - 농어촌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**총괄계획가(master planner) 제도** 시범 운용
- 농어업·농어촌 문화보전·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'**가칭**농어업 유산제도' 도입 추진
  - 농어업 유산 범위, 지정 기준·절차, 사후 관리·활용 방안 등 **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방안** 마련(3월)
  - 지자체(시·군)에서 신청한 향토자원에 대해 **전문가 평가** 및 심의를 거쳐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(7월)
  -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**법적 근거** 마련 검토
- 농산어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제고, 정주여건의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**포괄보조금 운영 내실화** 추진
  - 포괄보조금사업의 효과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·도별 1개소 이상 **집행점검** 실시(6~9월)
  - 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**TV 기획홍보** 실시(7월)

## 4 투자 활성화

### 가 농식품모태펀드 확대

◇ 민·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투자조합의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지원

#### □ 농식품투자조합 펀드조성 및 투자촉진 활동 강화

○ '12년에 5개, 1,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투자조합 추가 결성  
(누계 : 총 16개 투자조합, 3,300억원)

○ 사업성,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림축산업, 식품산업 등 집중 투자

\* '12년 '농식품모태펀드' 운용계획 수립(1월),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(3월), 운용사(업무집행조합원) 선정(4월) 및 투자조합 결성(7월 이후)

○ 투자조합 결성 2년 내에 결성액의 40% 이상 투자달성 추진

- 투자설명회 공동운영 등을 위한 지자체와 투자협력 MOU 체결(5월)

- 투자로드쇼(5월) 및 지역별 순회 투자설명회(9~10월)

#### □ 농식품경영체 교육·컨설팅 등 경영지원 기능 강화

○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·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실시(4월)

\*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사업 모집공고 후 10개 경영체 선정·지원

○ '농식품 투자아카데미\*' 과정 개설(6월)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
\* 투자관리전문기관 주관 연 2회(주말 4주, 32시간) 교육 실시



## 나 어항·어촌 인프라 구축

### ◇ 어항기능 다양화, 어촌관광활성화로 어촌경제 활력증진

- 수산업과 해양관광, 문화가 어우러진 **종합 어항개발**
  - 수산물 생산 및 관광·레저 기능 등을 겸비한 **다기능 어항 개발사업**(4개항) 추진(209억원)
    - \* '04~'13년까지 13개항 추진 중('11년까지 8개항, '12년 3개항 완공)
  - 이용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**기본 및 정비사업** 지속 추진
    - \* '12년 국가어항 29개항 1,436억원(기본사업 9개항, 정비사업 20개항)
- 어촌·어항을 연계한 **맞춤형 어촌관광개발모델** 개발
  - 어항주변을 관광시설로 정비하는 **어촌·어항복합공간**(7개소) 및 **어촌형관광단지**(11개소) 조성
- **2단계('12~'14년)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** 추진 및 기존 어촌체험마을의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
  - '12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**8개소** 추진(28억원)
    - \* '01년부터 전국 141개 '어촌체험마을' 조성중('11년까지 107개소 완료)
  -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**정기 운영실태 평가**(성공·발전가능·미흡마을)를 통해 **부실마을 퇴출 등 관리 강화**
    - \* 105개 마을 중 1차('10.8) 7개 마을 퇴출, 2차('11.8) 8개 마을 퇴출

## 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

### ◇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및 간척지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 개선

-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
  - 간척지 실태조사(4~9월) 및 '간척지 이용 종합계획' 수립(12월)
  - 대규모 농어업회사(영산강지구) 육성에 필요한 전기시설(18천kw, 48억원)을 설치하고, 제염대책 및 기반시설 지원방안 강구(9월)
  - '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(화옹지구, 15ha)을 완료하고, 농식품 수출전문 시범단지로 지정·운영
    - \* '11년 기반시설 완료, 유리온실(10ha) 조성 완료('12.11월)
  
- 새만금 지역 내부개발로 농업용지 조성(8,570ha) 추진
  - 농업용지조성 5공구 1,513ha(대규모농어업회사법인 용지 700ha 포함) 기반조성공사 착수('12.9월, '15년 완료)
  - 잔여지역은 '13년 기본계획 수립, '15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추진
  
- 쌀 수급조절을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하되,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임대정책 차별화
  -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(침수지역)과 타작물영농구역(침수안전지역)으로 구분, 구역별 차별화된 작물재배
    - 자율영농구역 :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 폐지
    - 타작물영농구역 :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
  - 타작물 임대기간은 5년, 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도작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'14년 재검토

### 3. 소득안정 · 위험관리

#### 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

##### 가 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

###### ◇ 직불제 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가 소득지원 강화

- (신규도입) 밭농업 및 조건불리 수산직불제
- (제도개선) 조건불리, 경관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제

□ (밭농업직불제)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확보를 위해 도입

-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지·증가가 필요한 품목 대상
-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쌀 직불금(평균 70만원/ha)보다 낮은 수준 지원
- ‘밭농업 직불제’ 신규 도입을 위해 관련규정 마련 및 직불금 집행·관리 등 이행점검체계 구축(5월)
  -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·규칙 개정
  - 작물별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연 2~3회 재배여부를 현장점검하되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원부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

□ (수산직불제)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

-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 도서내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- (농가소득안정직불제) 도상연습('10~'12년)을 지속하면서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
  - 3차 도상연습(5~12월) 확대 실시 (2차 19개 + 15개 내외, 44개 읍·면, 1만호)
    - \* '11년 도상연습(19개 품목) : 쌀, 한우, 콩, 고추, 마늘, 사과, 보리, 감자 등
- (조건불리지역직불제)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역('12~'16년) 재선정
  - \* 대상 법정리 : ('11년) 3,137개, 100천ha → ('12년) 약 3,541개, 109천ha
- (경관보전직불제)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체계 개선(1월)
  - 경관효과를 고려, 경관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사전심사 선정
  - 직불금 지급방식 단일화(2회 → 1), 경관작물 재배 이행조건 강화(주기적 점검을 통해 작물재배 증빙자료 구비) 등
    - \* 준경관 작물 중 파종시와 개화시 2회로 나누어 집행하는 직불금을 개화시 일시 지급
- (친환경농업직불제)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
  - 유기·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% 수준 인상
    - \* 논 : (유기) 392천원/ha → 600, (무농약) 307천원/ha → 400
    - \* 밭 : (유기) 794천원/ha → 1,200, (무농약) 674천원/ha → 1,000
  -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
## 나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 강화

◇ 농어업재해보험, 농어업인 재해공제 지원확대 등 재해 대비 위험관리 내실화로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

### □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·시행지역·보장재해 확대

○ 대상품목('11 : 50개 → '12 : 61)을 확대하고, 일부 시범품목(7개)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(본사업, '11 : 26개 → '12 : 33)

\* '12년 대상품목(61개) : (농작물) 35품목, (가축) 16축종, (양식수산물) 10어종

\* 전국확대 추가 품목(잡정, 7개) : 밤, 벼, 고구마, 옥수수, 마늘, 매실, 토끼

-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해상어류에서 내수면어종(뱀장어, 송어류 등)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(12월)

○ 특정재해(태풍·우박·집중호우·동상해) 보장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(설해·일조량·조수해 등)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검토(과수 5개 품목)

\* ('13) 뽕은감 → ('14) 단감 → ('15) 사과, 배, 감골

### □ 농어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 확대 및 보상수준 다양화

\* 사망시 공제금 : ('11) 농업인 50~70백만원/수산인 25~45백만원 → ('12) 50~80/25~60

### □ 어업인 재해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

○ 높은 사고율로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('06.2)되는 선외기(船外機)의 어선보험 실손보상특약 가입 허용 추진(2월)

○ 어선원보험 직업재활급여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(9월)

## 다 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활성화

◇ 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간 연계 강화로 농업인 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 도모

- 농기계 임대사업(정부)을 확대하여 발작물 생산 노동력 절감
  - 발작물용 임대사업소를 25개소 추가 설치('11년까지 220개소)
    - \* 발 농작업 임대사업 비중 : ('11) 18% → ('12) 25 → ('15) 50
  - 고추·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를 5개소 신규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자금률 제고('17년까지 38개 주산지 전체 지원)
    - \* 고추·마늘 임대사업소(누계) : ('12) 5개소 → ('15) 20 → ('17) 38
  
- 농기계 은행사업(농협)은 영세·고령농의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
  - 경운·이앙·수확 중심의 현 체제에서 육묘·방제·뺏짚결속 등을 추가하여 연중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
    - \* 농작업 대행면적 : ('11) 130천ha(벼 재배면적의 15%) → ('12) 170(20)
  - 농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직영조합을 확대하여 영세·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와 산간지 등 한계농지 위주로 농작업 대행 추진
    - \* 직영조합(누계) : ('11) 70개소 → ('12) 120 → ('15) 200
  
- 지자체 임대사업과 농협 은행사업의 연계 강화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
  - 통합정보시스템, 콜센터 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예약·배달서비스 제공
    - \* 현재는 논·밭 농기계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,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희망 농기계의 임대 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 예약 가능

## 2

#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
## 가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

◇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, 일제소독·예찰, 국경 검역 강화 및 유사시 신속 초동대응 체계 구축

-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(5~6월, 11~12월) 및 새로 태어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수시접종을 차질없이 실시
  - 3종 혼합백신(O+A+Asia1형) 공급(연간 35백만두) 및 자가접종
    - 소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(159천호, 연간 130억원)
  -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 실명제 운영(29천명), 월 1회 이상 농장방문 점검
  - 혈청검사 확대로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: ('11) 31천마리 → ('12) 87
  - 전국 백신 접종상황 점검·독려 및 취약지역 일제검사
- 일제소독·예찰활동 실시 및 유사시 초동대응체계 확립
  - 매주 수요일 농가·축산작업장 등 일제소독 및 방역본부 전화 예찰요원(500명)을 활용, 모든 농가 예찰활동 실시(월 2회 이상, 63억원)
    - 소규모 농가(129천호)에 대해 농협 소독전담반(400명)이 연중 소독(152억원)
  - 연 2회(6월, 10월) 가상방역훈련(CPX) 실시 및 상시 방역기구 운영
    - 위험기간 중 모든 방역기관에 상황실 운영 및 시·군별 '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(13천명)' 편성·운영

-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연계,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도입('12년)
  - 가축전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시 축산관련차량 등의 농장 출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역학 추적에 활용
  - \* 미등록시 또는 무선인식장치 미장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
- 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(KAHIS) 구축('12.10월)으로 예방·예찰 과학화와 가축질병 진단·통제기능 강화
  -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민·관 가축방역기관간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공유·처리 시스템 구축
    - \*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,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) : 가축질병 예방·예찰·진단·종합통제·사후관리 및 유전자변이분석, 시에측시물레이션 등 가능
  
- 축산관계자 신고·소독대상 확대 등 국경검역 강화
  - 대상확대 : 축산인(86천명)→축산관계자(608천명), 국민(필요시)
    - \* 축산관계자 : 축산인, 수의사, 가축인공수정사, 사료판매업자, 원유수집·운반자 등
  - 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검역 철저(위험노선 탐지권 집중 투입 등)
  
- 지자체 및 농가의 자율 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의식 고취
  - 방역미흡 지자체 불이익 조치 및 지자체 매몰보상금 20% 분담
  -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최고 80% 감액
  - 백신 미실시 농가 적발, 과태료 처분 및 집중관리
  - 농가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백신비용 일부 부담
    - ('11) 무상 → ('12) 전업규모(소 50두, 돼지 1,000두) 50% 자부담



## 나 AI 방역 및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

- ◇ 상시 방역체계로 AI 재발 방지 및 초동대응 강화
- ◇ 방역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수산생물질병방역시스템 정착

### □ (AI) 농가예찰·소독활동 강화 및 농가 방역의식 고취

-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·군의 사육농가 예찰 확대, 철새 도래지 점검 및 주변 농가·도로 소독 강화(특별대책기간 : '11.10~'12.4월)
  - \* 예찰 : 매주 1회 전화 → 3일, 월 1회 임상시험 → 2회 \*\* 소독 : 주 1회 → 2
  - \* 야생조류 포획검사 : 2천수 → 2.7, 분변검사 : 25천점 → 30
- 주기적·선제적인 농가 방역수칙 교육·홍보 추진
  - \* (생산자단체, 농협 등) 반기별 순회 교육 및 특별대책 기간 중 월 1회 이상 교육, (지자체) 하절기(5~9월) 중 관련자 대상 워크숍 개최, 권역별 집합교육 등
-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한 초동방역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
  - 특별대책기간 이전 지자체, 방역기관 등 가상 방역훈련(CPX) 실시(10월)

### □ (수산생물) 종합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방역 인프라 확충

- 질병관리 대상을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확대('수산동물질병 관리법' 개정, '11.7월)
- 양식 주산지별 전문 방역센터 확대 설치·운영 및 질병진단·실험장비 확보(전자현미경 등 12종, 30억원)
  - \* ('10) 2개소(동해, 서해) → ('11) 1(중앙) → ('12) 2(남동해, 제주)
-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확대('11 : 13억원 → '12 : 14)

## 다 자연재해 사전대응 강화

- ◇ 내재해형 농어업시설 보급 확대,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영농·영어기반 확충
- ◇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피해 최소화

### □ 내재해형 농업시설 지원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
- 폭설, 강풍, 호우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확대

\* 내재해형 원예·축사시설 지원 : ('11) 1,692억원 → ('12) 5,499

- 여름(태풍·호우), 겨울철(폭설) 자연재해 예방·신속복구 추진

\* 농작물·시설 관리요령 지도·홍보, 재해상황실 운영, 응급복구, 재해복구비 지원 등

### □ 집중 호우 등 최근 강우패턴 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, 수리 시설 보수·보강 및 지진 대책 추진

-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노후 수리시설 보수·보강 등을 위해 716개 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추진

-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24천ha('12준공 4.2) 및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농촌용수개발 34천ha('12준공 2.1) 시행

- 최근 강우 패턴분석과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조사결과(3월)를 반영, '중장기 수리시설 보수·보강계획' 수립(6월)

\* 저수지, 양·배수장 및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 등에 대한 보수·보강 계획

- 내진 특등급 이상 규모 저수지 15개소 '지진계측기' 설치 완료(12월)

\* 지진계측기 설치(2천만톤 이상) : ('10년까지) 3개소 → ('11) 4 → ('12) 8

- 집중호우, 가뭄 등에 대비, 뚝 높이기 대상 저수지(113개소)에 자동수위 계측기 설치

□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에 따른 어항시설 안전 강화

- 어항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, 취약시설에 대해 보수·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수·보강 추진('14~'20)

\* 안전성 평가 어항(총 81개항) : ('10) 13개항 → ('11) 51 → ('12) 17

□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위험지 등을 생활권 중심개편

-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·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·개편(12월)

\*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: ('11) 3개소(인제·평창·봉화) → ('12) 전국 확대

- 사방댐(695개)과 계류보전사업(416km) 등 사방사업을 주택·건물 등 주거지역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

\*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·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

-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지정관리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□ 선제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

-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강화
  -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 연장(120일→150), 산불감시원의 봄철 집중 고용(70%→80) 등 예방활동 강화

-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위한 영상전송 시스템 시범운영('12년 2대)

- 기계화 진화장비·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산불진화단 운영(6개, 2~5월)

-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,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전국권역 지원

## 가 FTA협상 대응

◇ 국가별·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FTA 전략추진으로  
농수산업의 민감성 보호를 통한 개방부담 완화

- FTA 상대국별 농어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방수준을 조절하되, 우리 농수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기회로 활용
  - (미국) 관련법률 개정 및 보완대책 추진 등 이행준비에 만전
  - (호주·콜롬비아) 주요 품목(쇠고기 등)의 양허는 협상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하되, 최종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
    - \* 쇠고기, 낙농품 등에 대하여, 한·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 중
  - (중국) 농어업 등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체계 구축
    - 품목별로 영향 추정 및 분야별 제도분석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하되,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
      - \*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(317억불)중 중국이 16.1% 차지('10년, 51억불)
  - 공동연구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아시아 국가(한·중·일, 베트남, 인니)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캐나다, 터키 등과의 본격 협상 대비
    - 다각적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시장 확대 및 자원 거점 확보
- 농어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

## 나 FTA 보완대책 후속조치

◇ EU,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비준·발효에 대응하여 FTA 국내보완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□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

○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'FTA특별법' 하위법령 정비(3월)

- 품목별 지급한도 설정 : 법인 5,000만원, 개인 3,500만원 범위 내

○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,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

등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(관계부처 협의)

\* '조세특례제한법', '소득세법 시행령' 등

□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

'FTA이행 지원센터' 운영(2월~, 10억원)

○ 지원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) 중 지정(1월)

- FTA협정과 관련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상담·안내

- FTA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·분석, 업무 수행

□ 지자체,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FTA 보완대책 홍보 지속

○ 농수산물식품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, 지역 설명회 개최 등

## 다 DDA협상 대응

◇ 2012년 새로운 작업방향에 따른 논의에 대비, 주요쟁점별 입장 재검토 및 양허방향에 대비

- DDA 협상이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이나 '12년에는 새로운 작업방향 설정을 통해 협상이 재개·활성화될 전망
  - 제8차 WTO 각료회의('11.12월)제기에 마련된 향후 작업방향 및 협상일정에 따른 농업·수산업 협상 진전 예상
- 향후 새로운 DDA 세부원칙 논의 대응을 위해 주요쟁점별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, 협상타결 후 단계도 철저히 대비
  - 논의방향에 따른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 검토·대비
  - 공조그룹(G33, G10)과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
- 특히,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
  -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일본, EU 등 입장유사국과의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
  -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,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

## 4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### 1 안전 농식품 공급

#### 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

◇ GAP · HACCP 등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, 방사능 · 중금속 등 잠재적 위해요소와 수입식품 감시 강화

#### □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 추진

- 농협 공동선별출하회 등 생산자조직을 **GAP인증조직**으로 육성
  - 생산자조직에 대해 GAP인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병행
  - \* GAP참여농가 : ('10) 34,421농가 → ('11) 36천 농가 → ('12) 40
- 농가 부담경감 및 GAP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'**품목별 GAP인증심사기준**' 마련('농산물우수관리규정' 개정, '12년 하반기)

#### □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로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적용 확대

-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~판매 모든 과정의 **일괄 HACCP 적용체제 구축**('12년 10개 시·군 축산브랜드 대상)
  - 시·군별 브랜드 경영체를 활용한 HACCP 적용 축산물 육성 및 모든 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 도입
- 농장·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'**HACCP 표준 모델**' 개발·보급(12월)

## □ 새로운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적 위험평가 및 관리 강화

### ○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위험평가 기능의 통합·조정

- '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'을 구성, 각 단계별 위해요소의 예측 및 조기 대응 체제 구축(6월)

### ○ 내장을 함께 섭취하는 두족류(낙지 등) 및 갑각류(꽃게 등)에 대한 중금속 위험평가 연구 및 기준 설정 검토(12월)

- 주요 품종\*(10개)에 대한 중금속(9종) 모니터링 연구 추진(6월)

\* 대상 : 오징어, 낙지, 문어, 꼴뚜기, 주꾸미, 대게, 홍게, 꽃게, 대하, 보리새우

### ○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·운영

- 일본 및 태평양 연안국가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속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

\* 방사능 분석장비(36대) 및 인력(8명) 추가 확보('12년)

## □ 수입 축·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입위험 분석체계 확립

### ○ 수출국의 위생·관리시스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('축산물위생관리법' 개정, 12월)

\* (현행) 수입위험평가지, 가축질병 및 위생제도 평가 병행 실시 →

(개선) 가축질병 위험평가 이외에 상대국 위생관리 시스템 평가 체계 마련

### ○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, 2중 검사체계 구축(12월)

\* ('11) 5개국(태국·중국·인니·베트남·러시아) 6개 약정 → ('12) 6개국(대만), 7개 약정

### ○ 대미 굴 수출을 위해 FDA와 '한·미 패류위생양해각서' 갱신(6월)



## 나 취약분야 위생관리 강화

◇ 도축장·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체계 개편

### □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및 기준 강화

- 오염원 제거에 중점을 둔 도축장 설비 및 위생 관리기준 정비
  - 시설·장비 등의 위생관리 기준 및 생고기·부산물에 대한 검사·위생관리 지침 보완(‘축산물위생관리법’ 시행규칙 개정, 11월)
- 위생규정 위반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(11월)
  - \* 허가취소(1년 내 4회 → 3회) 및 과태료 상향 조정(300~500만원 → 500~700만원) 등

### □ 폐광산·산업단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집중 관리

- 관계부처(환경·지경부)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금속 오염 정보 공유를 위한 GIS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(12월)
- 폐광산(반경 2km → 6) 및 기타오염우려지역(산업단지, 매립장 등)에 대한 농지·농산물 중금속 조사 강화(‘11 : 4,800건 → ‘12 : 5,600)

### □ 신규 위해요소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

- 잔류농약·항생제 중심의 조사(‘10년 전체조사물량의 93.5%)에서 방사능 핵종·병원성 미생물 등 신규 위해물질 조사 확대
  - \* ‘12년 방사능 조사(400건→1,500), 유해미생물 조사(500건→1,000건 이상) 단계적 확대
-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학교급식, 인증농식품(친환경, GAP, HACCP)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

## 다 소비자 참여 및 소통 강화

◇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 조성

### □ '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\*'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 강화

\* 소비자 · 생산자 · 전문가(학회) · 식품업계 · 언론 · 정부

○ 현장방문, 협력사업 등 이해관계자 간 '교류 프로그램' 운영(매분기)

○ 정책대상별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

- 어린이,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, 건강식단 및 유해안전정보 등 제작(연2회)

\* 실시간 교류를 위한 SNS 및 스마트 매체 활용 교류 서비스 개발(3월)

### □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의 단계적 개편 지속 추진

○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수립(2월), 지정 심사 매뉴얼 마련(8월) 등 인증기관 지정·관리기준 국제화(ISO 등)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인증 농식품 및 공통 표지(logo)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단체·생산자단체·대형유통업체 등과 공동 홍보 추진

### □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
○ 음식점 원산지표시 기재 시, 글자크기 및 표시 위치 등 표준화(6월)

\* 글자 크기 : (현행) 음식명 글자 크기의 1/2 이상 → (개선) 음식명 크기와 동일

○ 대중적 수요가 높은 가공품(커피류, 차류 등)의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(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, 10월)

## 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

◇ 친환경 농업·축산업·어업의 생산 기반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

### □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·유통 기반 구축

○ 개별농가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('12년 : 신규 8개소/누계 42) 등으로 규모화

-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,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지원 및 기술지원단 운영
-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단지 내 양분총량을 관리

\*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

○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('11 : 250만톤 → '12 : 270)하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을 축소('11 : 67만톤 → '12 : 50)하여 지력증진 도모

\* '12년 화학비료 사용 목표량은 218kg/ha으로 '10년(232kg/ha) 대비 6% 감축

- 겨울철 유희농경지 녹비작물 재배 확대('11 : 103천ha → '12 : 115)
- 친환경 실천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친환경인증농가, 친환경단지 등에 친환경비료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

\* 친환경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퇴비 품질등급제도 운영을 내실화

○ 국내 최초로 준공('12.8월)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(경기 광주)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(상반기)으로 유통 활성화 도모

-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토록 운영체계 마련

\* 전남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신규 건립 추진('12~'15년, 289억원)

□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

-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, 친환경농산물 유통모니터링 지속
  - 인증기관별 인증실태, 사후관리실태, 인증시판품 등을 평가 분석
- 재포장취급자 의무인증제 도입(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  -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재포장업체, 인터넷 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·단속
  - \* 품관원에 20개 단속반(지원별 1~3개)을 편성, 취약시기 테마단속
-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인증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

□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소비 활성화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농가 확대 및 지급단가 조정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('12년 연구용역)
  - \* 지급단가(현) : (한우) 유기 170천원/마리, 무항생제 65, (돼지) 유기 16, 무항생제 6, 지급기간: 3년
- 체험형 교육·홍보 강화로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축산물 시장 확대

□ 친환경·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

-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한 친환경어구 보급
  - 기존 나일론 어구를 바닷물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('12년 30억원, 350척)
  - 규격부표(고밀도부표) 보급(1백만개) 및 굴패각 자원화(12.5만톤) 지원
- 수산물이력추적제 확대를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·공급
  - \* 수산물이력추적제 참여업체 : ('10) 1,100개소 → ('11) 1,230 → ('12) 1,400

## 마 녹색 식생활 교육

◇ '녹색식생활' 운동 2년차를 맞아 인식확산을 넘어 전국민 생활화 정착을 위한 참여 확대

-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민간 주도 녹색식생활 운동 확산
  - 시·도, 시·군 지자체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성 확대('11 : 16개 시도/10개 시군 → '12 : 16/20) 및 활성화 사업 지원
  -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및 농어촌 우수 체험공간 지정 확대
    - \* 교육기관·체험공간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·단체, 농어가·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추진('11년도 지정현황 : 교육기관 22개소, 체험공간 72)
  - 학교·가정 내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지원
    - 방과후 교실(90개교), 농어촌 체험(25천명), 연구학교(40개교)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지원하고, 가정식생활수첩 보급(12월, 100만부)
- '녹색 식생활' 범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
  - '제2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'(7월) 및 지역단위 박람회 개최
    - 광역시·제주도 등 7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, 시군 단위 확대 검토
  -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단 개발·보급 및 홍보강화
    - \* 일본 '녹색등 달기 운동' 등 해외 '로컬푸드 운동' 선진 사례 벤치마킹
  - 트위터·페이스북·블로그 활용, 녹색식생활 스마트폰 앱 개발·보급(4월)

## 가 협협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

◇ 협협중양회를 1중양화2지주회사(협협경제·금융지주) 체제로 전환(3.2일)

○ '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하물량의 50%이상 책임판매

\* 조합 출하대비 중양회 판매비중 : ('11) 10% → ('12) 14 → ('20) 54

□ 경제부문을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 정착

○ 협협의 유통·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

- '12년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(안성센터 기계·설비 설치), 양곡유통센터 착공(안성),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(부천) 등 추진

\* 투자계획(총 3조 5,899억원) : ('12) 7,791 → ('13~'16) 23,525 → ('17~'20) 4,583

○ 산지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 조직화(쌀 10만호, 원예 10, 축산 1)

○ 경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협중양회에서 경제지주로 연차별 사업이관('17년 완료)

- 현행 경제자회사(13개)를 경제지주회사로 통합(3.2일) 하고, 도·소매, 농업용 자재 등 협협중양회 경제사업은 5년 내 경제지주로 이관

○ 경제지주-조합간 계열화를 통해 품목별 전국단위 유통시스템 구축

- 사업 완전이관 이전 협협중양회내 경제조직은 지도·지원기능을 통합·효율화하여 원예·양곡·축산 등 품목별 전문판매조직 체제로 전환

\* 쌀 판매회사(조합-중양회 공동출자), 원예도매전담조직, 축산마케팅조직 등

-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선조합 지원사업 개선
  -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방안을 제정('12.3월)하여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    -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, 조합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되던 방식을 조합 판매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체계 변경
  -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이관 일정에 따라 경제자본금으로 단계적 이관(5년 이내)
  
-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한 산지유통의 규모화·전문화 촉진
  - 법인 설립은 산지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('12년 11개 설립)
    - \* ('12) 11개소 → ('13) 14 → ('14) 19 → ('15) 12 → ('16) 19
  - 중앙회 인력 및 자금지원(2,868억원 지분출자)으로 사업기반 마련
  
- 경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
  - 농협 경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·평가(연 1회 이상)
    - 농식품부장관 직속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(3월~)
      - \* 농업인단체 2명, 유통전문가 3, 농식품부 공무원 1, 중앙회 직원 및 조합장 5, 기타 4
  - 평가결과를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반영 및 경영 지도 등에 필요한 조치 추진
  
-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합판매사업 확대 등 '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' 마련(12월)

## 나 수협 경영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

### ◇ 수협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경제사업활성화 본격 추진

-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경영혁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
  - 바젤Ⅲ\* 시행에 대비, 중앙회 자립경영 기반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(6월)
    - \* 바젤Ⅲ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적 은행 감독기준(보통주자본비율, 기본자본비율, 총자본비율)임
  - 일선수협 재무상태 집중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(8월) 및 부실예방시스템 구축(12월)
-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'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세부실천 계획' 마련(5월)
  - (중앙회)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 담당
    - 주요품목 매취사업을 확대하고 가격안정기능 강화방안 마련
    - \* 수협 매취사업 규모 : ('11) 12만톤 → ('12) 15만톤
  - (일선수협) 제값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 기반 구축·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 촉진
    - 중앙회와 연계, 일선수협 수산물연합판매 사업 시범 추진
- 어촌계를 선진적 공동체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(10월)
  - 생산조직에 특화된 사업개발, 어촌계 운영방식 개선 등



## 다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

◇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 감축 및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·선진화

### 【농산물】

#### □ (관측) 조사기반 정비 및 관측 정확도 평가

○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측표본 및 모니터 재설계 추진

-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조사표본수 등 조정

\* 시군별 경작면적 규모 증감 및 재배품목 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사표본 개선

○ 관측 운영시스템 및 관측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실시

- 표본 및 모니터의 응답 충실도, 관측 오차 및 만족도 등 분석

- 평가결과에 따라 미진 항목 보완, 부실표본·모니터 교체 등 실시

#### □ (수급안정 시스템)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조절 능력 확충

○ 지역농협은 농가와 계약하여 품질관리를 전담하고, 중앙회는 판매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방식을 도입

- 배추·무에 대해 고정가격에 의한 다년계약(3년) 방식을 시범 도입

\* 계약규모 : ('10) 생산량의 8% → ('11) 12 → ('12) 20

○ 수급의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에 대한 재배면적과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양념류의 국내산 비축 확대

\* 국내산 비축율('11→'12, %) : (고추) 0 → 2, (마늘) 1 → 2

□ (도매시장)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, 도매유통 투명성·효율성 제고

-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 신설(6월) 및 정가수의매매 조기 정착 유도
- 전국 공영도매시장(33개)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(3~6월)
- 가락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('12 : 549억원)을 차질 없이 추진

□ (직거래) 온/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 활성화

-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(aT)의 단체급식 식재료 사업 확대
  - 학교급식 외의 영역으로 B2B(어린이집, 교정시설 등) 확대
    - \*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: ('10) 1,755억원 → ('11) 6,255 → ('12) 7,150
  - 규모화된 산지공급자 및 대량구매가 가능한 소비지 공동구매조직을 발굴하여 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
    - \*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적정가격으로 사전 예약에 의한 거래방식 정착 유도
-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 장터 개설('11 : 8개소 → '12 : 10)

□ (농축산물 할당관세) 적용기간 및 추천방식 등을 수급안정과 연계 운용

- 할당관세 적용물품이 수급상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(3개월, 6개월 등)
- 수급안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추천물량을 차등 배정(유제품 등)

## 【축산물】

### □ (유통구조) 도축·가공·유통·판매의 일관유통 체계 구축

○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 통합경영체(대형Packer) 집중 육성 및 직거래 확충

- 대형 Packer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간 과당경쟁 피해 축소 및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효과적 대응

○ 축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(부천, '12~'15), 농협 안심축산이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판매기능 확대

\*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: ('11) 한우 8%/돼지 0.5% → ('12) 20/7 → ('15) 50/18

### □ (도축산업)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유통구조 합리화

○ '도축·가공·유통'의 연계가 가능한 거점 도축장을 선정·중점 지원

- 거점 도축장을 중심으로 운영자금, 도축시설 개·보수 등 정책사업 지원을 집중하고, 위생수준 및 경영관리 상태 등을 지속 평가

○ 통합 도축장 지원방식 개선\*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가속화 ('11 : 83개소 → '12 : 77 → '15 : 36)

\* 현행 : 4개 이상 통·폐합시 지원 → 개선 : 도축 물량 고려

### □ (육가공산업) 제품·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

○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, 휴대 등 편의성 강화제품 개발

○ 축산분야 R&D 효율성 제고를 위한 '미래축산포럼'을 구성 ('12.1), 축산물 가공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

\* 5개 분과위 : 생산성, 친환경, 식품가공, 질병방역, 신성장동력

## 【수산물】

### □ (인프라) 수협과 연계, 산지-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

- 거점 위판장과 연계, 집적·상품개발·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육성('12 : 2개소 신규)
  - 자동선별기·파레트·지게차 보급 등 산지 물류자동화 확대
  - 위판장 등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·보급(12월)
- 노량진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('12~'15년 2,024억원)를 통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저온물류설비 구축
  - 소비지 수산물유통 거점으로 '소비지 분산 물류센터' 추진 검토
    - \*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후 예비타당성 등 검토
- 산지·소비지 유통기반 확충, 물류 효율화, 거래제도 개선,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'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' 마련(9월)

### □ (수급) 비축 및 할당관세 운영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 강화

- 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
  - 오징어, 명태등 4개 주요어종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비축운용을 위해 조기, 삼치 등 대체품목 운영
    - \* 수산물 비축율 : ('10) 소비량의 0.4% 수준 → ('11) 0.8 → ('12) 1 → ('15) 5
-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, 수입 할당관세 운영
  - \* '12년 상반기에 고등어(1만톤) 수입 할당관세 추진

### 3

## 안정적인 식량공급

### 가 쌀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

- ◇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 맞추어 적정 생산 및 쌀 소비홍보를 통한 소비감소 추세 완화로 수급안정 도모
- ◇ '매취방식'에서 '수탁방식'으로 쌀 유통체계 개선 추진

- 논 4만ha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동시 도모
  - '12년도 벼 재배면적은 금년(85만ha)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    - \* 증가요인 :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종료(대상 논 6천ha), 간척지 조성(1.1천ha)
    - \* 감소요인 : 연간 농지전용 면적(7~10천ha)
  - 타작물 재배 대상 논에 조사료, 두류(콩·팥 등) 등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이 재배되도록 유도
    - 조사료 수확비 지원 확대,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'14년까지 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증대('10 : 1,597천톤 → '14 : 3,138)
    - \*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용 확대 지원(3만원/톤→4만원/톤), 대단지 우량농지를 조사료 생산특구로 지정(5년간 50개소)
-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, 고품질 쌀 가공제품 개발,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 추세 완화
  - \*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치 : ('00~'09년) 2.2kg → ('09~'11) 1.2
- (밥쌀) 소비자가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포장표시에 등급('11.11월)과 단백질 함량('12.11월)을 포함

- (가공품) 쌀밀가루(쌀함량 10%) 공급 확대,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로 쌀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제고
  - \* 쌀 가공업체수 : ('10) 735개 → ('11) 811 → ('12p) 850
- (교육·홍보) 합리적 식생활교육 강화, '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' 등 소비자 지향의 다양한 쌀 소비확산 운동 전개
  - \* 초등학생에게 쌀 관련 보조교재('11년 보급)를 활용한 식습관 교육 실시, 쌀 애니메이션(프랭키와 친구들) 제작·방영(3억원),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
- 매년 수확기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쌀값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벼 수탁거래 활성화 추진
  - '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% 이상('11 : 20%)을 수탁매입 의무화
    - '19년까지 출하 벼 전량 수탁매입을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
  - 수탁거래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벼수탁거래 가이드북('11.10월, 20만부 보급)을 활용, '12년초부터 농업인·RPC·농협 등에 교육 실시
-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연계, 농협중앙회 주도의 대형 쌀 유통회사를 설립, 쌀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는 체계 구축
  - 1단계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간 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2단계로 쌀 유통회사 설립('13년말)
    - 지역조합 50개 이상 참여, '20년까지 연 100만톤 판매능력 확보
    - \* 자체 가공판매 50만톤(수도권 10, 지방 40), 위탁판매 50만톤
  - 산지농협과 쌀 유통회사 간에 전문화된 분업체계 구축
    - (산지농협) 생산관리·수집·가공, (쌀 유통회사) 브랜드화·가공판매

## 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

- ◇ '12년 가공용 쌀 소비를 40만톤까지 확대('08 : 22만톤 → '15 : 60)
  - 쌀가루 생산능력과 공급대상 확대, 가공용 쌀 원료 안정조달 체계 구축, 가공기술 R&D 지원 강화

### □ 쌀가루 생산 및 공급체계 현대화

- 공장형 쌀가루 생산능력 확충으로 위생·안전성 확보, 쌀 가공식품 품질향상 도모
  - 영세 자가제분 위주에서 공장형 대량 생산과 공급체제로 전환 유도
  - \* '11년에 연간 쌀가루 소비량은 약 20여만톤 이상이나, 쌀가루 전문 제분 업체 63개소에서 5만톤 수준의 쌀가루 생산
  - 쌀 가공업체의 쌀가루 생산시설 확충 지원('12년 500억원, 3%)
- 쌀가루 혼합 밀가루(쌀밀가루) 공급체계를 확충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및 물가안정 기여('11 : 800톤 → '12 : 1만톤 → '15 : 10)
  - 쌀밀가루 제분공장과 음식점 간 직송체계를 구축, 밀가루보다 20% 이상 저렴하게 공급(20kg당 밀가루 22~25천원, 쌀밀가루 16천원)
  - 수도권, 음식점 위주('11년)였던 쌀밀가루 공급대상을 '12년에는 전국 대형마트까지 확대
  - 쌀가루 혼합 비율 확대, 가공 용도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다양한 소포장 제품 보급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정착
  - \* (쌀가루 혼합비율) 10% → 20, (제품 포장단위) 20kg + 1kg, 3kg, 5kg

□ 쌀 가공업체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자체 원료조달 능력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

○ 쌀 가공업체의 다수확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확대

\* 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 : ('11) 1.6천ha → ('12) 5 → ('15p) 30

- 생산·가공·유통주체가 참여하여 계약재배 방식으로 추진

- ha당 1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다수확 품종 개발·보급 추진

○ 전용재배단지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부 재고쌀을 가공용 원료로 저가에 공급('07년산 기준 밥쌀용 : 920원/kg, 가공용 : 355원/kg)

□ 쌀 가공식품 품질혁신 및 신규수요 창출 등을 위한 R&D 집중 추진

○ 신제품개발·제품가공·신소재·품질제고 등 5대 가공분야의 55개 핵심기술 개발에 '11~'15년까지 700억원 투자

\* '12년에는 30개 기술개발에 60억원 투자('11년 26개 기술, 52억원)

○ 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R&D 수행체계 구축

\* 쌀 가공업체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쌀 가공기술 연구협의회 구성·운영

- 기관별로 분산 추진 중인 연구개발을 종합 조정, 효과 극대화

- 전체 쌀 가공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, 종합 관리체계 구축

□ 쌀 가공식품 수요 확대를 위해 전시홍보·마케팅 적극 전개

○ '12년부터 쌀가공식품 전시관을 개설(농협 쌀박물관 내)·운영

○ 쌀 가공식품이 학교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도록 적극 추진

- 업체 공동 설명회 및 시식회 개최, 가공식품 급식메뉴얼 제작·배포 등

○ 쌀 가공산업 전시회(10월), 쌀떡볶이 페스티벌(5월) 등 체험·전시행사 개최



## 다 식량자급률 제고

◇ '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\*('11.7월 상향조정)와 신규 설정한 '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품목별 자급률 제고 대책 추진

\* 곡물 25%→30, 밀 1→10, 채소 85→86, 축산물 71→71.4, 과실 66→80, 조사료 86→90

### □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한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

○ (밀) 국산 밀 생산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조·저장시설 설치 확대('12 : 4개소) 및 수요창출을 통해 안정성장 기반 조성

- 생산량의 35%까지 저장능력 확충('11 : 12개소 → '15 : 58)

- 국산밀의 우수성,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 확대 도모

○ (채소류) 마늘 우량종구 갱신,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보온커튼·지열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

\*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: ('12신규) 60ha → ('17) 3,600

\* 에너지 절감시설(누계) : ('11) 2,700ha → ('12) 4,065 → ('17) 10,050(64%)

○ (과실류) 품종갱신, 비가림·방풍·방조시설 설치 등 생산시설 현대화 면적을 '17년 37.8천ha까지 확대

○ (축산물) 축사시설현대화, 방역 등을 통해 적정 사육규모 유지

- 쇠고기 : 과잉 한우 사육두수 감축 유도(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, 한우 암소 도태 확대 등)

- 돼지고기 : 살처분 사육두수 회복(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)

○ (수산물) 자급률 목표치 신규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('11.12월)

-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업생산 잠재력 극대화

\* 인공어초(4천ha)·바다목장(150ha) 조성 및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(1억마리)

□ 수입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국산조사료 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'10년 대비 '14년에 양질 사료작물을 2배 증산

○ 조사료 생산특구(10개소, 5천ha),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(5개소) 조성 등을 통해 사료작물 생산면적 52% 확대

\* 조사료 재배면적 : ('10) 244천ha → ('11) 260 → ('12) 330 → ('14) 370(52%↑)

\* 사료작물 생산량 : ('10) 1,597천톤 → ('12) 2,522 → ('14) 3,138(97%↑)

○ '14년까지 배합사료 대비 조사료 급여비율을 확대하여 수입 사료곡물 비중 축소 및 사료비 절감 도모

\* 소 두당 사료급여량중 조사료 비율 : ('10) 45% → ('14p) 55%

□ 겨울철 유희 논에 밀, 보리,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

○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불량 논 배수개선을 실시하여 농지 범용화 및 밭작물 재배기반 확충

\* 배수불량 논 232천ha 배수개선 추진('11년까지 153.4천ha → '12년 4.2천ha)

○ '15년까지 추가로 유희농지 164천ha에 밀·조사료·녹비작물 등 재배 추진,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1천ha로 확대

\* '10년 벼 재배 논 892천ha 중 겨울철 재배농지는 417천ha(47%)에 불과

□ 식량자급률 달성 정도와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 상황 지속 점검·보완

○ 매년 생산자단체, 전문가 등으로 '식량자급률 점검단'을 구성, 식량자급률 달성 상황을 점검·평가(6월 점검 실시)

○ 점검·평가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·시행

## 라 해외농림업개발 활성화

- ◇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금융·제도 지원을 확대하여, 해외 농업개발 면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
- ◇ 인니·파라과이 등 8개국에 25천ha 해외조림 투자

-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면적을 2배 이상 확대('11 : 37천ha → '12 : 80\*)  
하고 확보 곡물의 반입물량 확대 \* 수집·유통 물량의 환산면적 포함
- 동남아·동유럽 등에는 대규모 농장 개발, 미국 등 생산·유통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에는 유통망 구축에 초점
  - 동남아 : 필리핀(MIC 사업 본격 추진), 인니(MIC 사업 타당성 연구), 캄보디아 등 기타국가 MIC 진출 추진
  - 미국 : aT 컨소시엄을 통해 산지 EL 인수합병 및 수출 EL 1기 확보
    - \* 미국 곡물유통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, 우크라이나, 연해주 등의 곡물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여건 조사 및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
  - 기타 : 우크라이나·러시아·호주 등 민간기업 대규모 농장개발 지원
-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자조건을 석유·광물 등 수준으로 개선(3년 거치 7년→ 5년 거치 10년)
-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(2월), 투자타당성 조사·교육훈련·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구축
- 해외농업 진출기업과 식품·사료 등 실수요자 단체를 연계, 국내반입의 확대 유도

-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에 따라 ‘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’ 재정비
  - 농장개발과 유통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‘20년까지 밀·콩·옥수수 등 주요 곡물수입량의 40%(643만톤) 확보
    - \* 민간기업(138만톤, 38만ha) 및 민·관 합작 곡물유통회사(505만톤)
  - 농장개발 및 가공·유통 등 전·후방 연관산업 동반 진출
  - 농진청 해외농업기술센터(KOPIA)는 현지형 종자·기술을 개발하고, 농식품부 ODA 사업 등으로 보급 및 교육 훈련 체계 구축
  
-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곡물정보 시스템 구축·활용 및 비상 쌀 비축을 통하여 식량위기에 대응
  -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\*을 활용하여 곡물시장 변동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식량위기 발생시 신속대응포럼(RRF\*\*)을 통해 대응
    - \* AMIS: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
    - \*\* RRF(Rapid Response Forum): 식량위기사 관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대응방안 논의
  - ‘아세안+3 비상 쌀 비축(APTERR :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)’ 국회비준을 통해 아세안+3국간 비상시 식량안보 도모
    - \* 13개국이 총 787천톤(한국 150천톤)을 약정, 비상시 이를 판매, 장기차관 또는 무상지원
  
- 해외조림지역을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출지역 다변화(8개국 25천ha)
  - 인니에 양묘·조림·가공 등 목재 펠릿 연료 공급 일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림 추진 \* (‘12) 대상지 선정·기본계획 수립(2만ha)
  - 남미 조림투자 거점 마련을 위한 파라과이 신규조림 실시
    - \* (‘12) 1천ha → (‘15까지) 5 → (‘20까지) 10

## 마 농림분야 협력사업 확대

◇ 농림분야 협력으로 개도국 식량·산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내 농식품 관련 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□ ODA 국별협력전략(CPS : CountryPartnership Strategy)에 따라 농림 분야 개발수요가 높고 진출기업과 연계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

\* 국제농업협력사업 : ('11) 10개국(100억원) → ('12) 12개국(105억원)

- 필리핀 농촌개발 지원,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 등 해외농림업개발과 전략적으로 연계(5개 사업, 20억원)
- 인니·카메룬 벼농사 기계화 단지 조성 지원,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 등 농산업 해외진출과 연계(4개 사업, 23억원)
- DR 콩고·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와의 에너지자원 외교를 영농 기술 전수 등 ODA로 측면 지원(4개 사업, 23억원)

□ 국제기구와 함께 식량안보, 가축질병 등 현안에 공동대응

- FAO 등과 공동으로 '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\*' 및 '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' 추진(2개 사업, 10억원)

\* 베트남, 라오스, 캄보디아에 FAO 구제역 통제 프로그램 도입 지원

- 빌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'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' 지원을 위한 수자원 지도화(mapping)사업 추진(7억원)

□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식량문제 해결 지원 및 수입 농·축산물 위생여건 향상 도모

- 아시아 개도국 대상 방역·식품안전·종자기술 등 역량강화(100명)
-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, 15개국 설치) 개발 기술(씨감자 생산, 옥수수 신품종 등) 전수를 위한 대형 시범단지 조성(캄보디아 등 5개국)
-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·아프리카 식량증산 등 농업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다자간 기술 협력 강화
  - \*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(AFACI) : ('11) 14사업 → ('12) 18
  - \* 한-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(KAFACI) : ('11) 18사업 → ('12) 20
- 제10차 UN 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총회('11.10월) 시 채택된 '창원이니셔티브\*' 이행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준비
  - \*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, 동북아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
- 아프리카·아시아 사막화 방지 및 식생복원 지원
  - 건조지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토지황폐화 방지 및 식생복원 사업, 한국의 산림녹화기술 및 녹색성장 경험 전수
  - \* UNCCD, UNEP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지역 조림사업 추진('12년 5억원)
-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\*) 사무국 국내 설치('12년), ASEAN 등 회원국 조림 및 역량강화 지원
  - \* 제14차 한·아세안 정상회의시 '한·아세안 산림협력협정' 서명('11.11.18, 인니)
  - 아세안 국가에 황폐 산림복구,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(20억원)
  - \* ('11) 아세안 9개국 → ('12) 아세안, 몽골, 키르기스스탄 등 확대
  - 인니 산림자원 조사 및 아세안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\* 구축(10억원)
  - \* 산림에서 감축한 CO<sub>2</sub> 배출량에 대해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모니터링, 보고, 검증이 가능할 때 CO<sub>2</sub>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

## 바 수산자원 외교강화 및 협력 증진

◇ 국제수산 협상 역량 강화 및 ODA 확대를 통한 해외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 확보

### □ 국제수산 협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 정비·보완

- 협상 인력·조직 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협상 거버넌스 체제\* 구축(3월)

\* 대학, 연구기관, 업계와 함께 협상 전문인력 풀 확충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

- 협상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,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(3월)

### □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·이용을 위한 전략 다변화

- 우리 어선의 조업을 직접 규제하는 국제수산규범\*은 초기 논의단계부터 적극 참여·대응하는 등 규제수준 완화에 총력

\* UN, FAO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업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의 규제(공해 저층 어업 관리, 부수어획 통제 등)의 신설이 계속 논의되는 추세

- 불법어업(IUU) 방지, 국제옵서버 확충 등 이행이 불가피한 국제규제는 적극 수용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

### □ ODA 사업을 자원확보 및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개편

- 주요 연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 확대('11 : 10억원 → '12 : 16)

-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원(受援)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(6월)
- (일본) 우리 어선의 입어규모·조업조건 개선 및 민간협력 강화
  - 규제강화 예상 업종에 대한 국내 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입어 규모 적정화('11 : 870척 → '12p : 850)
    - 조업 금지수역·기간·어구 등 입어 규제 완화에 협상력 집중
  - 어업협의회 등 민간 창구를 통한 동해 중간수역의 자율적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기조 유지
- (중국) 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및 EEZ 입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등량·등척 지속 추진
  - 불법 중국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에 자국어선의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
    - 중대위반 어선(무허가, 영해침범, 폭력저항)에 대한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등(9월)
  - 서해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추진(12월)
    - 어종별·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및 한·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공동 치어방류 실시 등 자원조성
- (러시아) 투자·협력 강화로 명태 등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
  - 러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력 및 극동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 입어환경 조성
    - 러시아산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계류에 대한 '원산지 증명제도' 시행(4월)
  - '한·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'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(6월)



## 4 기후변화 대응

### 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

◇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·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강화

- 단기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대응체계 구축
  - '농업관측기동반' 운영 및 농업 기상정보 제공 대상 품목 확대
    - \* 농업기상정보 제공 품목 : ('12) 2개 → ('15) 5 → ('20) 10
  -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 개발·보급('12년 115품목)
- 중장기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역량강화
  - 온난화에 따른 작물 생산예측 및 기술개발(품종개발, 병해충 방제기술, 재배기술)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
    - \* 내서성 배추·무 품종개발 : ('11) 0개 → ('12) 2 → ('20) 4
    - \* 아보카도, 용과, 석류, 올리브 등 아열대성 소득 작목 선별(누계) : ('11) 15개 → ('12) 18 → ('20) 25
    - \* 고온적응성 넙치, 전복, 미역 등 품종 개발(누계) : ('11) 0개 → ('12) 2 → ('20) 9
-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  - '(가칭)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'('14년부터 설치·운영예정)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('12)
    - \* 식량 생산예측,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, 실시간 작황관측 등
  - 농어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간 연계방안 마련 검토
    - \* 온실가스 감축활동(물걸러대기 등)을 직불제 지급요건으로 포함 등

## 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

◇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 및 흡수원 확대를 통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

### □ 식품분야 '12년 온실가스 배출량 24천tCO<sub>2</sub> 감축

- '11년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(26개)의 감축 이행중간점검(6~7월)
  - \* '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목표 설정(9.30) 및 이행계획서 작성·제출(12.31)
- 관리대상 식품업체들에게의 온실가스·에너지 절감 최적가용 기술 분석 및 보급 추진(10월)
- 중소 식품기업에게 인벤토리구축·명세서·이행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실시(3~6월, 5개 업체)

### □ '탄소상쇄사업' 및 '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' 시범 도입(3월)

- (탄소상쇄사업) 탄소배출권 거래제('15년 시행)에 대비,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분(Offset)을 크레딧화하기 위한 검·인증체계 구축
  - \* '12년 : 저탄소 녹색마을, 지열히트펌프 설치 농가 등을 대상으로 2건 실시
- (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)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 부여('12 : 쌀, 상추 등 5개 품목에 대해 10건 인증)

### □ 조림 및 숲가꾸기, 바다숲·도시숲 조성 등 탄소 흡수 녹색공간 확충

-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에 신규 조림 확대(1천ha) 및 숲가꾸기 (25만ha)를 추진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
  - \* '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' 제정('12년 하반기)

- 바다숲 840ha(159억원), 도시숲 264ha(528억원) 신규 조성

## 다 농어업분야 에너지 절감

◇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
(’11 : 가온시설면적의 17% → ’12 : 25) 등을 통한 비용 절감

### □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등 효율적 에너지 이용

- 중·소규모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
(’11년까지 1,880ha → ’12 : 850ha 추가)
-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·장비 교체(’11 : 323척 → ’12 : 473)  
및 연근해어선 감척사업(’11 : 684척 → ’12 : 624) 추진
- 시설내 국소 냉난방 기술,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,  
오징어 채낚기용 LED 집어시스템 개발 등 R&D 추진
- 유류 사용이 많은 농가 보유 농기계 중심으로 시간계측기 부착  
확대(’11 : 14천대 → ’12 : 18)로 실 사용량 확인시스템 구축
  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, 농가별 영농규모를 반영한 면세유 공급

### □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- 대규모·자동화 온실 지열난방 보급(’11년까지 460ha → ’12 : 155ha 추가)
  - \* 지열난방은 경유 대비 17천만원/ha비용 절감(유가 100\$, 파프리카 기준)
- 중·소규모 온실(150ha) 및 농가주택(3천호)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
  - 바이오부문 최초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
  - \* 민·관 합동으로 난방기 설치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분기별)